

## 곳간 구멍 뚫린 저축銀 집중 보수 나선 금융위

###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연계를 악화 여파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5000억원 규모로 적자를 내고 연체율도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당국이 저축은행 관리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부 회의를 통해 건전성 개선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 ▶ 관련기사 3면

17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회는 전국 지역별 6개 지부(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 호남, 충청) 대표 등이 모여 진행하는 지부장단회의를 열었다. 지부장단회의는 중앙회 회장 직속 자문기구로, 저축은행 회원사의 고충이나 의견을 수렴해 이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라며 "최근 현안 중 PF 연체채권 규모나 당국의 PF 연착륙 방안 등을 설명하고 회원사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업권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저축은행 5곳의 최고경영자(CEO)들은 현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5곳에는 자산 규모 기준 대형저축은행 1곳과 중소형 저축은행 4곳이 포함됐다.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최근 저축은행 PF 사업장 관련 부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금융위와 업계 관계자들은 저축은행의 추가적인 2차 PF 정상화 펀드 조성 및 운용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업계는 지난해 말 앞서 조성한 330억원 규모의 1차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

저축은행중앙회 전국 지부장 회의 PF 연체채권 규모 등 개선안 논의

당국, 이례적 CEO 비공개 간담회 PF사업장 정상화 추진 상황 공유 내주부터 연체채권 관리 현장점검

상화 지원을 위한 펀드' 집행을 완료하고 곧바로 2차 펀드 조성에 착수했다.

PF대출연체 채권에 대해 3개월 주기로 경·공매를 시행해야 한다는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 개정건에 대해서도 업계의 견해를 전달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에 3개월마다 경·공매가 어려운 이유와 공매가격이 문제가 되는 상황, 일괄적인 표준규정 적용이 아닌, 물건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한 탄력제 시행 여부, 예보로, 햇살론, 대손충당금 등 업권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한 업권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금융위에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저축은행업계 대표와 간담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연체율, 수익률 등 저축은행 업권 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당국이 저축은행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 이후에는 저축은행중앙회 고위 관계자와 PF 펀드 조성 상황, 연체율 상황 등 전반적인 업권 현안에 대한 의견 공유 자리를 추가적으로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도 감독 수준을 강화했다. 최근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계에 지난달 기준 부동산 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 내주부터는 일부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관리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유하영 기자 haha@

## 파월 "2% 물가 더 걸릴 듯"... 금리인하 기대 '찬물'



미래 아닌 현실 된 기후위기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Earthemble)' 참여 학생들이 지구 의날(4월 22일)을 맞아 17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에서 기후위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후위기 대응을 호소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어셈블은 '지구를 위해 모였다'는 뜻으로, 세이브더칠드런 소속의 아동·청소년 주도형 모임이다(사진 위쪽). 행사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행사는 18일까지 잔류해 대부분 지역 대기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조현호 기자 hyunho@

소비자물가·소매판매 예상치 상회 "긴축정책 효과 내도록 기다려봐야" 월가, 年 1~2회 인하로 전망 수정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조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중지를 찍었다. 이제껏 펼쳤던 긴축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기다려 보자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관련 포럼에서 "최근 경제지표는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확실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4·6면

파월 의장은 "노동 시장 강세와 자금까지의 인플레이션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은 제한적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시간을 더 두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거론한 최근 지표들은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소매판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주 나온 3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해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또 지난해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7% 증가하며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미국 경제가 더 탄탄하다는 점을 다시 입증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 입장 표명에 시장은 출렁거렸다.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대표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와 금은 올랐다. 미국 국제 2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5개월 만에 처음으로 5%를 돌파하고 10년물 금리도 지난해 11월 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 금리가 올랐다.

시장은 사실상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경로를 추적하는 CME그룹의 페드워치에서 6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은 84.8%에 달했다. 7월 동결 확률도 50%를 훌쩍 넘었다. 월가 애널리스트 대부분은 올해 연준이 기껏해야 한두 차례만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WSJ는 짚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외국인 여성 A 씨는 국내에서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위해 대사관을 찾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등록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A 씨는 대행기관을 통해 출생신고 방법을 찾았으나, 출생신고서에 쓰인 A 씨의 영문명과 여권 영문명이 달라 이마저도 어려웠다. 다른 방법을 찾던 중 A 씨는 아이를 외조모에게 맡기고 사라졌다. 외조모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본국에 입국해 출생등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아이를 양육하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고 '무국적'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어린이집에 등록할 수 있었다. 17일 국회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

## 종교·국적법에 '발목' ... 출생신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

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불법체류 중인 부모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 거부하기도 하고, A 씨의 경우처럼 해당 국가의 국적법이 발목을 잡기도 한다. ▶ 관련기사 2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아이를 출산한 외국인 부모는 본국 대사관을 방문해 직접 출생등록을 해야 한다. 문제는 각 나라 국적법이 서로 다르고 까다롭거나 제한이 많은 곳은 출생등록이 어렵다는 점이다. 네팔 등 일부 국가는 국적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출생등록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내에 대사관이 없는 국가도 58개국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 58개국, 대사관 없어 출생등록 불가 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 거부하기도 어린이집 못가 발달 지연도 다반사



에 이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출생등록을 기한 내에 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면 제한적으로 체류를 허가하지만, 그 방법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여성 B 씨의 경우는 종교가 문제가 된 경우다.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B 씨는 아이에게 자신의 국적을 부여하려 시도했으나, 그의 국적국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 나라에서 아이에게 여권을 발급 해주지 않아서 B 씨와 아이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데, 한국인 친부도 '태아인자'를 거부해 출생등록에 어려움이 따랐다. 긴 설득 끝에 '임의인자'를 도와주

며 아이에게 어렵게 대한민국 국적을 줄 수 있었다. B 씨는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려 했으나 외국인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친부가 협조하지 않거나 잠적할 경우 외국인 미혼모가 홀로 자녀를 등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만약 친부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면 아이는 무국적자로 살 수밖에 없다. 친부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잠적하면 외국인 미혼모가 단독으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자녀를 외국인 등록하는 것도 어렵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은 사회성을 갖춰야 할 시기에 어린이집에 진학이 어려워 발달 지연 장애를 겪는 일도 다반사다. 그간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되고 교육받을 기회와 기본적인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수진 기자 abc123@

# 아이의 삶이 기록될 수 있게... ‘출생 사각지대’ 외면 말아야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21헌마975)

많은 전문가들은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아동뿐 아니라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사회적 객체로서 인격을 갖추고 성장·발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마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 이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미 서너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거쳤다.

두 제정법안 모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부모 법적 신분 무관하게 출생등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률안 발의

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 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는데,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신분증명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국회는 전제적인 입법 목적은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다. 다만 출생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정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입

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담당 부처 이견... 국회서 폐기 위기 ‘속인주의 국적법에 어긋’ 우려도

장이다. 특히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이후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 추진에 속도를 올려온 만큼 이와 연결되는 부분인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까지 말으려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의 인권 향상을 통해 출생등록제를 권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이유에서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가 이들의 출생등록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인권침해나 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아닌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에서 이를 다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향후 이민청이 설치되면 이민청장이 그

런 권한을 갖거나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업무를 다룰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이 밖에도 출생등록제는 ‘속지주의’인데, 현행 국적법상 ‘속인주의’와 배치된다는 지적과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 불법체류를 묵인하고 아동을 유기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론도 제기된다. 굳이 법을 제정하지 않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는 1월 마지막으로 열렸다. 출생등록이 안 돼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 유령 아동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5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아동들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출발점”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제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 임기 중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abc123@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찬반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권고</li> <li>- 국민으로 한정되던 출생등록제를 외국인까지 적용해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li> </ul> | 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인주의’인 국적법에 ‘속지주의’ 성격인 출생등록제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li> <li>-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제도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li> </ul> |
|---|----|---|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 아동의 교육권 보장 등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와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아동은

총 984명이며 이 중 786명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체류 중이다.

교육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라 할지라도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교육 기본권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 이들 중 3분의 1가량이 법무부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셈이다.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한 아동 중 198명은 체류자격 부여 심사 중이거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뒤 출국, 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다.

이를 통해 임시체류자격(G-1)을 받아 국내 체류 중인 고교 졸업자는 총 6명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2022년 1월 체류자격 없이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에게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을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에게 교육권을 보장해주는 취지다.

법무부는 앞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내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통해서도 아동과 부모 신청자 83명 중 80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 대상 아동이 제한적이어서 국내 체류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자, 법무부가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더욱 넓힌 것이다.

기존에 체류자격을 부여하던 대상은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으로 한정됐다. 이 같은 체류자격 부여 대상이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영·유아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으로 확대됐다.

이수진 기자 abc123@

Kdn 한전KDN
www.kdn.com

# 에너지로 사람을 밝힙니다



배려가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나눔이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사회를 향한 한전KDN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밝히는 에너지CT기술,  
한전KDN이 시작합니다



# 올 만기도래 익스포저 6.5조... 저축銀 트리거된 부동산PF

(16개 업체 기준)

## ④ 연체율·자산건전성 빨간불

지난해 말 저축은행 자산 상위 10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년새 대폭 올랐다.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은 "저축은행의 손실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저축은행 자산 상위 10개사(SBI·OK·한국투자·웰컴·애규온·페퍼·다올·모아·상상인·신한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기준 0.27~13.2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기준 연체율은 0.01~5.03%였다. 1년 새 상당과 하단이 각각 8.21%포인트(p), 0.26%p 올랐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자산 상위 10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4조498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조9733억 원)보다 9.6%(4753억 원)가량 줄어든 수준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본PF 보다 사업 초기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의 비중이 타업권보다 높은 상황이라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저축은행의 경우, 브릿지론 비중이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54%로, 증권(26%)나 캐피탈(36%)에 비해 높

연체율 상단 1년새 8%p 상승  
기업대출 악화·신용도 하락  
저축銀 절반 넘는 41곳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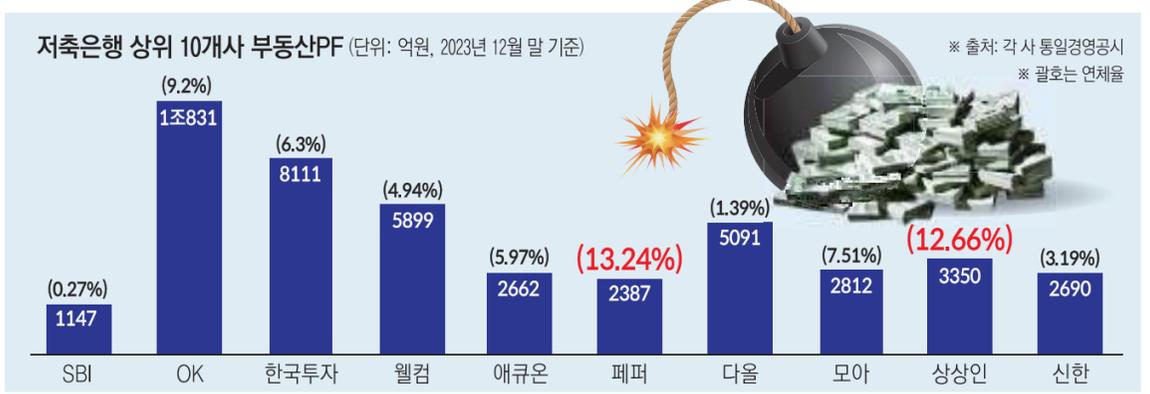
16곳 익스포저 5조 상반기 만기

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저축은행 위험 익스포저 추이에 대해 총여신 대비 위험 익스포저 비중이 지난해 9월 기준 58%로 높은 상황이고, 자본완충력이 낮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80%가량이 올해 만기도래한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나이스신용평가 보고서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분석 대상인 16개 저축은행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84.8%에 해당하는 6조5000억 원이 올해에 만기도래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PF 익스포저도 5조1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브릿지론의 경우, 약 70%에 해당하는 2조7000억 원의 만기가 올해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김한울 나신평 연구원은 "부동산 PF 자율협의회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만기 연장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뚜렷한 위험 해소방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만기도래



에 따른 저축은행 부담은 점차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는 5559억 원의 적자를 냈다. 2014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9년 만에 적자 전환이다. 79개 저축은행 중 절반이 넘는 41곳이 적자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율, 고정이자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도 악화했다. 연체율은 6.55%로 전년 말(3.41%) 대비 3.14%p 상승했다.

2015년 12월 9.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크게 오른 탓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8.02%로 전년 말(2.9%) 대비 5.12%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5.01%로 같은 기간 0.27%p 올랐다. 고정이자여신비율은 7.72%로 전년 말(4.08%) 대비 3.64%p 상승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6.94%로, 전년 말(2.05%)보다 3배 이상 상승했다.

개별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도 줄줄이

내려갔다. 나신평은 이달 15일 페퍼저축은행 장기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조달비용 및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된 점과 자산건전성 저하, 자본적정성 지표 열위 등을 조정 근거로 들었다. 페퍼저축은행의 등급전망이 내려간 건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에는 나신평이 수익성 저하 등의 이유로 더케이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의 등급전망을 낮춘 바 있다.

유하영 기자 haha@

## 건설사→금융기관 부실 확산 2011년 저축銀 사태와 유사

과거보다 PF 규모 커 파괴력 월등  
정부 "저축銀 손실 흡수능력 충분"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저축은행 부실이 2011년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건설산업연구원은 '부동산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부동산PF 위기는 2010년대 초 발생한 건설사들의 대량 부도, 그로 인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동반 부실 사태와 비교해 발생 원인과 구조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 부실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저축은행들이 연속해서 영업정지를 받으며 촉발됐다. 이후 5년간 저축은행 30여 곳이 파산했고 10만여 명이 넘는 소비자들과 후순위채권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

건설연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했고, 이는 개발사업장의 현금유입 축소, PF 연대보증 건설사의 대거 부실화, 금융기관의 PF 회수 곤란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부동산PF 위기는 미국발 금리인상이라는 외부요인에서 시작됐고 건설사의 1차 부실과 금융기관으로의 2차 부실 등 구조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부동산PF 규모 △다양하면서 복잡한 부실위험의 파급경로 △손실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들에 위험이 집중된 구조 △높아진 비용으로 인해 할인분양 등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금의 위기가 과거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부실 위험도가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5633억 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토지담보대출이나 브릿지론 등 PF 사업의 초기 단계에 실행된 대출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올해 80% 이상의 대출 만기가 집중 도래한다.

정호준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저축은행 브릿지론이 전체 PF 대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질적 수준이 낮다"면서 "본 PF의 경우 시공사 대부분이 신용등급 'BB' 이하이거나 무등급인 경우가 많아 준공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는 엄연히 상황이 다르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저축은행에서 5000억 원의 적자가 났지만 3~4년간 영업실적을 보면 거의 2조 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하다"며 "저축은행은 거의 배당 대신 내부 유보를 선택하고 있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대한민국 노후날씨 — 언제나 항상 맑음

노후날씨 맑음!

노인장기요양  
당신의 노후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책임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곁에 있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well  
국민건강보험

# '빌린 돈' 가득 삼킨 기업들... '줄도산 거품' 부글부글

## 기업 대출 리스크, 은행·가계에 부담

# 경기도 안산의 중소 부품 제조기업 A사는 최근 시중은행에서 서둘러 추가 대출을 실행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고,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들이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대출이 잘 된다는 업계 사장들의 귀띔도 한몫했다. A사 관계자는 "높은 금리에 이자가 부담되지만, 요즘 같은 경기에는 대출이라도 가능한 게 어디냐는 분위기가 전반적"이라고 말했다.

목소리를 낮추던 개(인플레이션)가 다시 짚기 시작한 것일까. 16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5%를 넘어섰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연 4.67%까지 오르며 5%를 눈앞에 뒀다. 다시 오르는 물가에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미국발 '금리의 역습'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지원으로 간신히 명줄을 잇는 벼랑 끝 기업(한계기업)들이 많아졌다. 특히 대기업보다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위태롭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렵다. 생존을 위해 은행(채권자)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이 늘어날 확률도 높아졌다.

17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대출 잔액은 785조 1515억 원으로 집계됐다. 3개월 만에 18조 원가량 늘어났다. 대기업 대출 증가액은 8조 원을 웃돌았다.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도 9조 원가량 증가했다.

기업대출 증가는 자산 건전성도 저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작년 말 부실채권은 12조 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업여신이 10조 원(80%)에 달했다.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해 1분기 말 0.5%에서 연말 0.59%로 상승했

## 美 연준, 물가 오르면 기준금리 올릴 수도 韓 기업대출 석달새 18兆 ↑ ... 中企 9兆

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은 0.38%에서 0.5%로, 중소기업 대출은 0.57%에서 0.64%로 상승했다.

기업들의 부채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 상장 기업들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112.78%로 전년 말 대비 0.11%포인트(p) 증가했다. 부채비율 상위 20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1061.31%에 달한다.

기업 줄도산 경고음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 10곳 중 4곳 한계기업... 고금리에 위기↑ 은행·가계 전이前 구조조정 선제대응을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좀비기업' 상태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이자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은 5.1배(2022년 말)에서 1.6배(2023년 3분기)로 낮아졌다. 이자보상배율 1을 밑도는 이자보상배율 취약 기업 비중은 2022년 말 37%에서 작년 3분기 말 44.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번 한계기업에 빠지면 벗어나기도 쉽지 않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계기업 상태에 진입한 기업 이한계기업들을 벗어나는 데 소요된 평균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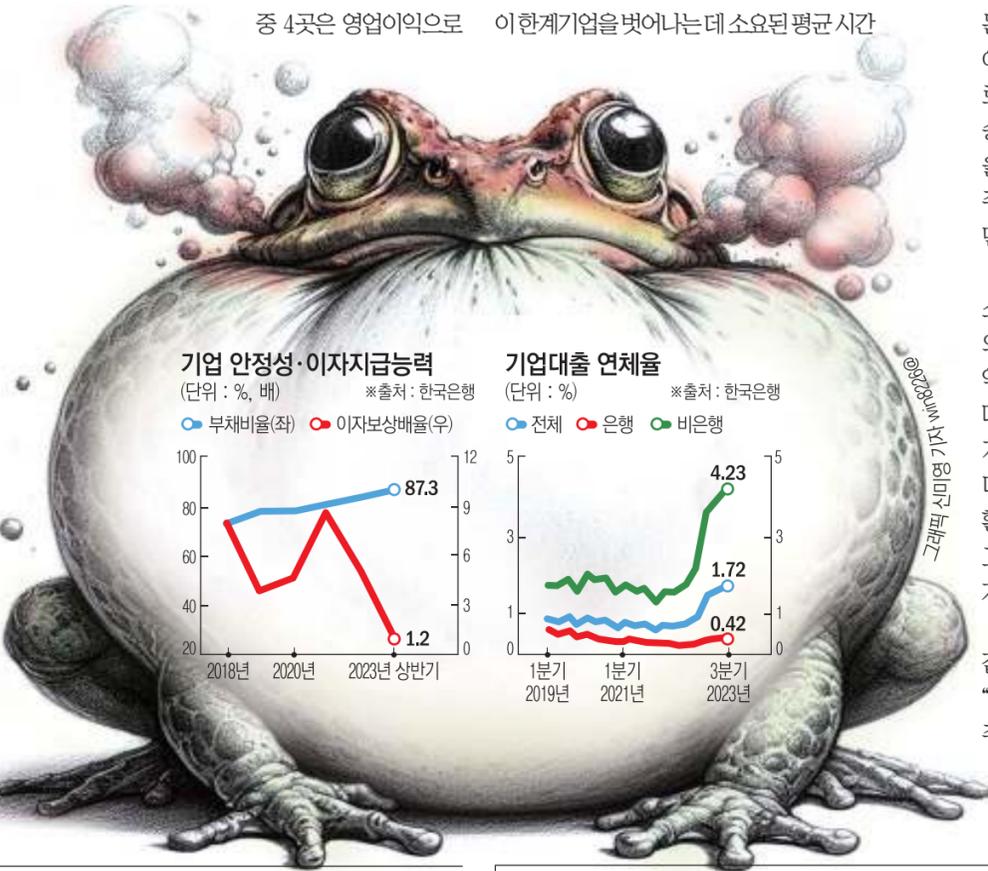
은 3.8년으로 10년 넘게 한계기업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금융연구원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외부감사법인 3만 4875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 10 미만인 부실기업의 부채가 전체 기업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6.8%에서 2022년 11.8%로 커졌다.

늘어난 부채와 한계기업은 시스템 위기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늘어난 부채가 디레버리징 고리를 만들 수 있어서다. '성장 둔화 혹은 위기 발생 → 기업 부채 증가 → 기업 투자 위축 → 구조조정 지연 및 공급과잉 지속 → 경제성장 및 기업 매출 둔화 → 기업 부채 증가'와 같은 디레버리징 사이클을 말한다.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그 충격은 가계로 전이된다. 돈을 빌려준 은행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작년 3분기 말 1.72%로 같은해 1분기 말(1.49%) 대비 0.23%포인트 상승했다. 결국, 기업이 힘들어지면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게 마련이다. 글로벌 자금이 위험자산인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 해외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증시를 떠버치는 유동성도 줄어든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부채가 부담스러운 것은 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외환위기와 같은 대형 악재가 아니라도 돌발 소형 악재에도 기업들이 쉽게 도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둔화 등으로 상환 능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비금융산업의 리스크가 금융기관에 전이될 가능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기업과 같은 취약부문의 재무구조개선은 시급한 과제"라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한 가운데 차제에 시장 주도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시화한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터질 듯, 말 듯... 가계빚도 '카운트다운'

### '1886兆 가계부채' 또 빨간불

"대출 감소세, 정책대출로 인한 착시효과"  
대의환경 악화... 韓銀, 정책 예단 어려워

전 세계 시장금리 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연 5%대를 돌파하면서 국내 가계부채에 또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글로벌 장기 시중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주변국의 은행채, 대출 금리도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이 주요국 중 가계부채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데 있다. '고금리 습격'이 시작되면 1886조 원대의 가계부채 부실화가 현실이 될 수 있어서다. 당장 이자도 갚지 못해 허덕이는 가계들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17일 한국은행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말(1867조 6000만 원)보다 18조 8000억 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걸쳐 전 카드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인 가계부채'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작년 말 잔액이 1768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말(1749조 8000억 원)보다 18조 5000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 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다만, 올해 들어 당국의 '빚끄기'에 가계대출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 6000억 원으로, 전월(1100조 2000억 원)보

다 1조 6000억 원 줄었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보증기금 정책대출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통계에서 빠진 '착시 효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계부채를 놓고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봤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계 상환 부담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경제 성장의 기반을 갉아 먹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제는 고금리 시대에 가계부채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엔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오를 수밖에 없고 금융당국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중동 사태가 가계 부채 부담의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동 사태로 인해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외부 충격을 자체적으로 견딜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대외적인 환경은 가계부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상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점진적 금리 인하 기조까지 후퇴시켰다. 김용구 상삼인증권 연구원은 "현재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내 연준 금리 인하가 아예 없거나 3회 미만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끼친다. 한은은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hly0403@ 김재은 기자 dove@유하영 기자 haha@

## "사지 말고, 몸 사리자"... 씨 마른 M&A

### '딜 주도' 사모펀드, 이자부담 허덕 국내 인수합병 규모 작년 대비 반토막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이 大魚 물색 중

"인수합병(M&A) 딜(deal)이 씨가 말랐다."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현실화하자 사모펀드(PEF)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저금리 차입매수(LBO)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M&A 시장 진입이 위축됐다. LBO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자금조달로 딜을 추진하는 PEF 운용사의 주요 자금줄이지만,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이 선택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17일 본지가 금융정보업체 딜로직으로부터 받은 '국내 M&A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집계된 국내 M&A 규모는 71억 43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36억 5200만 달러)보다 48% 가까이 줄어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이다.

시장참여자들은 '물밑 작업'은 활발하다고 얘기하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다. 이응문 올촌변호사는 "4월 총선이 있어서 기업들도 이를 지켜보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 이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큰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드라이파우더(미소진 자금)가 역대급으로 많다"면서 "출자자(LP)도

이제는 펀드에 투자한 돈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 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금리라는 북병이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시장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면 M&A 붐을 주도했던 사모펀드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며 LBO 방식 M&A 위협성을 경고했다.

실제 갚을 돈은 늘었지만,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기관관용 PEF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금리 기간인 1~3분기 신설된 PEF는 총 104개다.

LP로부터 모집한 자금은 14조 2982억 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 모집한 자금보다 11.4%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반면 이날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3.632%를 기록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고금리 시기 신규 자금조달 규모가 커진 만큼 외부 충격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는 게 업계 우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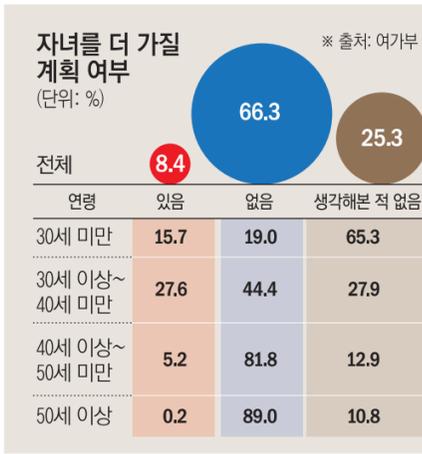
시장의 관심은 대기업들의 M&A 행보다. 2017년 하반기 인수 이후 대형 딜이 없었던 삼성전자는 30조 원 규모 해외 M&A 신탄를 장착했고, 현대자동차와 LG 역시 2조 원 안팎의 자금을 조성해 적정 매물을 찾고 있다. 재계 관계자 A 씨는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신탄이 상대적으로 두둑한 기업들이 오랜 동반자이자 경쟁자(M&A 시장)인 사모펀드의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 “자녀 원해” 8.4%로 늘었지만… 피할 길 없는 ‘저출산 쓰나미’

**여가부 ‘가족실태조사’ 결과**  
 1인가구 비율 3.2%p 증가  
 “자녀 계획 없다” 66% 달해  
 혼자 산다는 비율 50% 육박  
 “일·생활 균형지원 더 힘써야”

1인 가구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자녀 계획이 ‘있다’는 가구 비율이 3년전(5.9%)보다 소폭 늘어난 8%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 계획이 ‘없다’는 비율(66%)이 월등히 높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33.6%로 직전 조사인 2020년보다 3.2%포인트(p) 증가했다. 자녀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있음’이 8.4%에 그친 반면 ‘없음’ (66.3%)이 월등히 높았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출산 적령기라고 할 수 있는 ‘30세 미만’, ‘30세 이상~40세 미만’에 있는 63.4%가 자녀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엿보인다.

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 평균 희망 자녀 수는 1.5명으로 직전 조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1명과 2명은 증가했고, 3명

과 4명 이상은 감소하는 추세다.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47.4%로 직전 조사(34.0%)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했다. 이어 ‘이혼(재혼)하는 것’ 47.2%,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 39.1%,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34.6% 등이었다.

가사노동은 ‘아내’가 하는 비율(73.3%)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만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가사를 수행하는 비율(20대 56.4%, 30대 44.1%)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층이 낮을수록 가사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녀 돌봄 부담에서는 직전 조사 대비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반면 ‘아내(대체로 아내+주로 아내가)’가 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배우자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직전 조사 대비 ‘전혀 없음’과 ‘30분 미만’은 감소하고 ‘30분에서 2시간 미만’은 증가해 전반적으로 대화시간이 늘어났다.

부부관계 만족도 역시 ‘만족’(대체로 만족+매우만족)한다는 비율(66.2%)이 9.2%p 높아져 배우자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지원 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가족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204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여가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송석주 기자 ssp@

##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 “월급 300만원 이상 받는다”

**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 조사**  
 200만~300만 원 절반 넘어  
 경제적 부담 1위는 ‘병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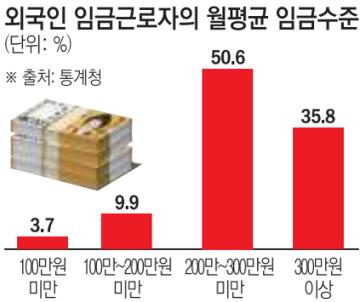
지난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36% 정도가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비 부담을 꼽았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체류자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파악 위주로 이뤄졌다.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E7), 유학생(D2, D4-1, D4-7),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다.

조사 결과 작년 5월 기준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비중은 200만~300만 원 미만인 50.6%로 가장 많았다. 300만 원 이상은 35.8%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100만~200만 원 미만 9.9%, 100만 원 미만 3.7%였다.

200만~300만 원 미만 비중은 비전문취업(66.5%), 전문인력(53.9%), 방문취업(51.5%), 결혼이민(45.4%), 재외동포(44.3%) 순이었다. 300만 원 이상 비중은 영주(51.8%), 재외동포(43.0%), 전문인력(43.0%) 순이고, 100만~200만 원 미만은 유학생(44.6%)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부문별 지출 비중은 생활비가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외송금(23.2%), 저축(15.7%), 주거비(11.8%) 순이었다. 국내외송금 횟수는 연평균 9.8회였다. 생활비 지출 비중은 비전문취업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서 가장 높았다. 주거비 지출 비중은 유학생(29.9%)이 가장 높고, 저축은 영주(21.2%), 전문인력(20.7%) 순이었다. 국내외송금 비중은 비전문취업(56.5%)이 가장 높고, 연평



균 송금 횟수는 비전문취업(10.7회), 전문인력(9.6회) 순이었다.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외국인 비중은 13.5%였다. 외국인의 경제적 어려움 유형(복수응답) 비중은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함’이 3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음(27.3%)’,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어려웠음(22.0%)’ 등이 뒤를 이었다.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한 비중은 재외동포(46.4%), 방문취업(43.0%) 순이었다. 공과금의 경우 유학생(31.7%), 결혼이민(31.3%), 영주(30.3%) 순으로, 학비는 유학생(42.3%), 비전문취업(36.1%) 순으로 어려움을 경험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12.3%이며 이직 희망 사유는 ‘임금이 낮아서(39.2%)’,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19.4%)’ 순이었다.

체류자격별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은 광·제조업이 44.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소매·숙박음식업(1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15.5%), 건설업(12.1%) 순이었다. 광·제조업 비중은 비전문취업(80.4%), 결혼이민(36.8%), 재외동포(33.1%) 순이었다. 건설업은 방문취업(28.2%), 재외동포(21.1%) 순으로, 도소매·숙박·음식업은 유학생(69.0%), 방문취업(29.4%) 순으로 높았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내일도 해야 합니다

오늘, 한화생명이 세계의 암 전문가들과 만나  
 당신의 내일을 지킬 테니

### 부디 오래오래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전 세계 암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글로벌암보호서비스**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을 통해  
 국내 최초로 시작됩니다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글로벌암보호서비스란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한화생명의 제휴사 Need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암 진단 전, 중, 후에 걸쳐 고객님들께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건강할 때부터 암을 통해 암 예방 관리를 도와주고 암 진단 시 담당 주치의에게 암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최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암 치료 후 부작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1588-6363**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는 한화생명보험(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암보험 가입일은 가입 후 91일 이후부터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일부 보장의 경우 가입 후 1년 또는 2년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1년 또는 2년 이후 지급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암보호서비스는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2.0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3.0 가입고객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는 청약 시 암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한 피보험자에 한하여 제휴업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여야 제공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이 유지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일 제 2023-05311호 (2023-11-14 ~ 2024-11-13) 준법감사인확인번호 CS 23-11-039 [www.hanwhalife.com](http://www.hanwhalife.com)

<가구당 총소득>

# 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사람'... 평균자산 6억 첫 돌파

## 신한銀 '2023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지난해 평균 가구 총소득이 2년 새 10% 증가하며 500만원 중반대를 달성했다. 평균 자산은 조사 이래 최초로 6억 원을 돌파했고, 가구당 부채 보유율은 3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1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3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64세 경제활동인구의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544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521만원보다 23만원(4.4%) 늘어난 수치다. 2021년(493만원)과 비교하면 최근 2년간 51만원(10.3%) 늘었다.

모든 가구소득 구간(1~5구간)의 월평균 총소득이 증가했다. 지난해 저소득층인 1~2구간의 증가율이 높았다. 1구간, 2구간의 월평균 총소득은 2022년보다 각각 6.6%, 4.7% 늘어나 195만원, 332만 원을 기록했다. 고소득층인 4, 5구간은 각각 4.1%, 4.3%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635만원, 1085만 원을 기록했다. 중소득층인 3구간(475만원)의 소득 증가율은 3.7%로 1~5구간 중 가장 적었다. 1구간의 소득 증가율이 5구간의 소득 증가율보다 커지면서 1~5구간의 소득 격차는 소폭 줄었다.

가구당 부채상환액은 54만 원으로, 2022년보다 2만 원 증가했다. 2022년에 전년보다 7만 원 늘어난 데 비해 증가 폭은 줄면서 소득의 10%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상품별 월평균 부채 상환액 비중을 보면 주택담보·전월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대출 증가세는 계속됐다.

주담대·전월세자금대출은 2022년과 동일하게 3만 원 늘었지만, 부채 비중이 53.7%로 증가하며 최근 3년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일반신용대출은 1만 원 줄어 들면서 부채 비중이 14.8%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총소득 544만 원 중 50.7%인 276만 원을 소비에 지출했다. 소득 증가로 지출 비중은 전년과 유사했다.

기본 생활비인 식비, 교통·통신비, 월세·관리비공과금 지출이 전체 소비의 과반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이 늘어난 이유는 전기·가스요금 이 급격히 오른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주거비의 경우 전세 사기 불안으로 인한 월세 수요 증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가구 내 평균 자산은 6억294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5억 원대를 유지했던 가구 내 평균 보유 자산이 지난해 처음으로 6억 원대를 돌파했다.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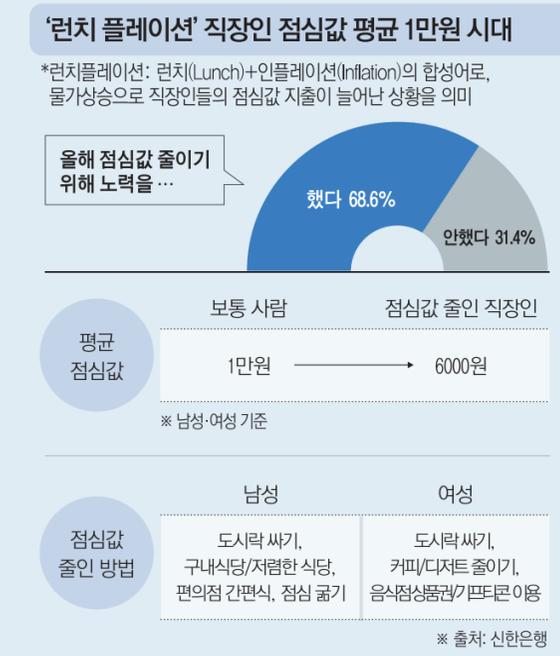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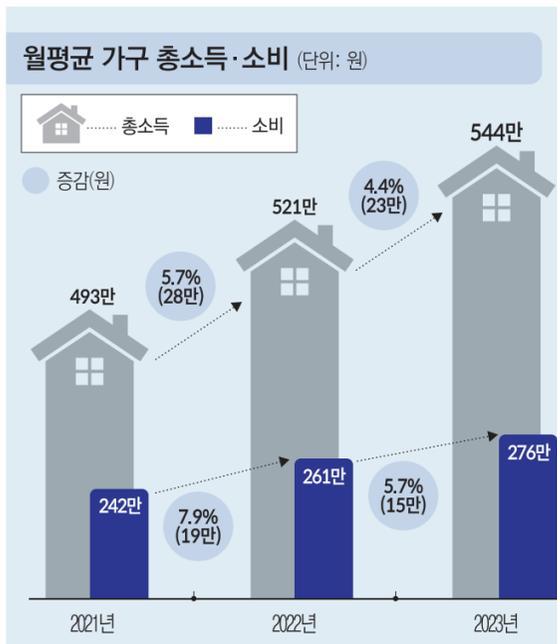
작년 가구소득 4.4% 늘어날 때 소비 276만원으로 5.7% 증가 부채보유가구 평균 잔액 1.2억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 빛 보유율 65%... 3년새 최저

점심값 늘어 '런치플레이션' 등장 직장인 10명중 7명 "절약 노력"

산 내 비중은 부동산 79.7%, 금융자산 13.6%, 기타자산 6.7%로 지난 3년간 유사했다. 보고서는 "집값이 떨어지고,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부동산 비중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자산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 규모는 지난해 4억8035만 원으로 전년보다 1926만 원 증가했다. 다만, 상승세는 꺾였다. 2022년에 전년 대비 11.4% 늘어난 반면, 지난해에는 4.2%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부동산 자산 상승세가 약화됐다.

지난해 평균 부채보유율은 64.8%로 3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까지 66%대를 유지하던 부채 보유율이 2.0% 포인트(p) 하락했는데, 고금리 영향으로 부채 보유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



인다. 부채 보유가구당 평균 부채잔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하지만 부채 상환액(소득 대비 비중)은 2022년(85만 원)보다 8만 원 증가한 93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직장인들은 점심 한 끼에 평균 1만 원을 지출하면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점심을 뜻하는 '런치(Lunch)'와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물

가가 올라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말한다. 월 소비액 대비 항목별 소비 비중에서도 식비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명 중 7명은 점심값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1400원 천장 뚫렸던 환율, 일단 '휴~'... "과도한 공포심 사로잡혀선 안돼"

(16일 장중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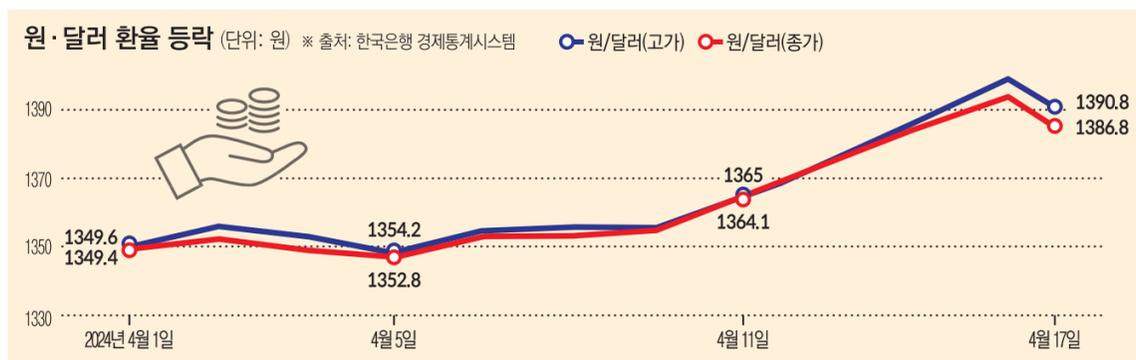
1달러=1386.8원... 7.7원↓

원·달러 환율 8거래일만에 하락 당국 이어 한일 경제수장 구두 개입 상승폭 반납... 속도조절 역할 커

원·달러 환율이 이달 들어 50원 가까이 급등하며 1400원(장중)까지 올랐다가 반락했다. 외환당국이 1년 7개월여 만에 공식 구두개입을 나설 만큼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7.7원 하락한 1386.8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5일 상승 마감(4일 증가 1347.1원→5일 증가 1352.8원)한 이후 영업일 기준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이달 들어설 때 1340원대(1일 증가 1349.4원)였던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널뛰었다. 이번 주 초 원·달



리 환율이 1380원대(15일 증가 1386.3원)에 올랐을 때 시장에서는 14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을 일찌감치 예상했다. 상승 속도는 가팔랐고, 약 2주 내 1400원을 터치할 것이라 전망보다 빠르게 1400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환율 상승세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공식 구두개입에 나섰다. 그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로 내

려왔지만, 상승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달러 강세가 꺾이지 않는 한 원·달러 환율에 상방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 이유에서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은 환율 상승의 속도를 늦추는 정도로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있었지만, 실개입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환시 개입 자체가 방향성 전환보다 속도

조절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1400원까지 다시 한번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달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라 1400원대로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오늘 하락은 그간 상승폭이 가팔랐고, 추세 전환보다 쉬어가는 분위기로 생각한다.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서 상단을 1420원까지 열었다"며 "배당금도 지

급이 되고 있고 증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달러 매수, 원화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구두개입에 나선 데 이어 양국 외환당국의 실개입까지 이뤄진다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은행(WB)에서 만나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외환당국이 실개입할 경우 일단 추세 전환까지 쉽지 않더라도 시장의 심리 자체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만약 일본마저도 실개입을 하고, 우리나라 외환당국도 비슷한 시기에 실개입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Samsung  
Financial Networks

# 보이는 보험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은  
삼성화재가 빠르게 달려가는 시간

보이는 보험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이 탄탄한 출동 네트워크로  
고객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26년 연속(1998~2023)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자동차보험부문 1위  
KMAC 선정

일상을 지키다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금 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 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16906호(2024.02.26~2025.02.25)

# 박영선도, 양정철도 아니다... '인적쇄신' 장고 들어간 尹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 여파로 수세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으로 정국 돌파를 모색하고 있지만 인물난에 봉착했다.

당초 이번주 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의 후임 인선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 요직을 차지했던 야권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다 서둘러 진화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17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입장을 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총리에, 문 전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서둘러 선을 그은 것이다. 양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윤 대통령을 추천한 인물로 전해진다.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을 때, 검사였던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국민 방문 당시 하

하·楊 기용설에 여당 내 거센 반발 대통령실도 "검토한 바 없다" 선그어

### 협치 화합형이나, 정책 추진력이나 尹, 공식일정 안 잡고 후보군 검토

버드대 강연 현장에 박 전 장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이어진 참모회의 때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밝힌 만큼 '협치' 차원에서 야권 인사 기용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내부적으로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김종민 정부 특임장관 인선안'을 검토한 적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가 총선 결과에 따른 '국정 쇄신'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여야 협치 국면 조성을 고려해 총리와 비서실장이 정해질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후보를 추천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윤재옥, 초선 당선자들과 오찬 회동

윤재옥(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초선 지역구 당선자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내세운 '쇄신과 협치'에 어울리는, 야당이 인정할 만한 인물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인선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리나 비서실장 기용 시 정부·여당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 내비판도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기용 보도와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당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라디오에 출연해 "새로운 인적 쇄신을 하는데

있어 말 그대로 제한 없이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보수 국민층이라든지 우리 내부도 고려해, (거론되는 야권 인사를) 동시에 (기용) 하는 게 맞는지 혹은 그중 일부라도 선택하는 게 맞는지 등 인사를 다루는 분들이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타격을 입었지만, 여야 모두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저출산' 관련 대책과 이를 총괄하고 집행하기 위한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추진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당위성을 갖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가 모두 저출산 대책으로 인구부서 신설을 공약한 배경에는 현재 인

## 與野 한목소리 낸 '저출산 부처' ... "필요성 따져봐야"

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정책 심의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어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저고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표한 '인

### 정부 '저고위' 중앙행정기관 격상 집행·예산권 부여, 역할 강화 고심 "기존 정책 문제점 먼저 파악하고 다양한 해결방안 찾아야" 의견도

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설립 의도와 달리 저고위는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

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저고위는 비용 대비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취약한 컨트롤 타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이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

한 고영준 입법조사관은 "기존의 인구 정책들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직설계안 없이 전담 부처 설치를 논의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 문제 특성을 바탕으로 기존 추진 체계의 한계가 무엇인지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제안 중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이 과연 당위성을 갖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 50+세대 고품격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4월호 발매




**BRAVO SPECIAL**  
우리가 찾고 원하는, 시대어른

**PART 1** 다시 생각해야 할 '어른'의 의미  
**PART 2** 존경받는 어른,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존재!  
**PART 3** 세대 갈등 10년의 변화 들여다보니  
**PART 4** 시대 연구자 3인, 이 시대 어른을 말하다  
**PART 5** 유난무브먼트 "어른 될은 성숙한 시민성 아닐까요?"  
**PART 6** 김수환-이여령, 그들은 왜 추앙받았나  
**PART 7** '교감과 통찰 기르기' 어른이 공부하는 이유

**BRAVO INTERVIEW**



시인 노태주  
"비운 낙엽 태우면 고수운 땀새나"



박이추 커피명장  
커피에 미(美)저 조연을 자처하다

**레시피**  
주꾸미볶음과  
봄나물튀김

**법률 가이드**  
결혼으로 인한  
세금 해법은?

**귀능귀촌**  
화전민이 살던  
고가에서 살았더니...

**브라보 여행**  
하늘도시 영종과  
여행의 아이콘 김찬삼

**하방비책**  
유튜브 운동법,  
무작정 따라하면 안되는  
세 가지 이유

**지역 문화유산 순례기**  
혁명 군주 이성계의  
강렬한 기백을 보려거든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재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 액화수소충전소 국내 첫 가동... 하루 버스 120대 충전

## 인천가좌 충전소 준공

기체 충전보다 부피 800배 작아 충전 빨라지고 폭발 위험 없어 3톤 이상 대규모 운송도 가능 정부, 2030년 280기 확대 예정

수소버스와 수소화물차 보급확대에 필수적인 액화수소충전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환경부는 17일 인천 서구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에는 총 70억원이 투입됐다. 사업자인 세운산업과 SK E&S는 제작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70억 원의 60%인 42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시간당 12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하루평균 수소버스 120대에 수소를 채울 수 있다.

액화수소충전소가 상업 운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



17일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수소 버스를 직접 충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는 올해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수소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데,

기체수소를 영하 235도로 냉각하면 액체로 변해 액화수소가 된다.

액화수소는 부피가 기체수소의 800분의 1에 그친다. 같은 공간에 기체수소

보다 800배 이상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으며, 차량에 충전할 때 속도도 빠르다.

많은 양을 저장하기 위해 200기압 이상으로 압축해 저장해야 해 폭발 위험성을

감내해야 하는 기체수소와 달리 액체수소는 대기압 수준의 저압에서 저장할 수 있어 더 안전하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기체수소의 1회 운송량이 300kg인 것과 비교해 1회 운송량이 3톤 이상으로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와 수소화물차 등의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90기인 수소충전기를 2030년 660기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액화수소충전기는 내년에 40기, 2030년에 280기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 1월 준공된 부산에너지리미티의 경남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현재 시운전 중인 SK E&S의 인천 서구 액화수소플랜트, 효성하이드로젠이 울산에 구축 중인 액화수소플랜트가 모두 문을 열면 국내에서 연간 3만6900톤(t)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가 먼저 확고한 탄소중립 노력과 함께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김 수출 1억弗 '노하우 공유'... 신안 가는 해수부 장관

토크콘서트서 주민·기업인 대화 '어촌·연안 활력대책 퍼즐 맞추기' 해양수산 민생개혁 TF 발표 예정

정부가 어촌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해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개혁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해수부는 그동안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강도형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토크콘서트는 2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귀어귀촌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는 3월 13일 강원 양양에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진행된 바 있다.

두 번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스타귀어인 발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조형물 설치 △마리나와 해양관광 콘텐츠의 연계 등 총 64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이 중 '바다여행 일정만들기'를 통한 해양관광 콘텐츠 연계 등 25개 과제는 이미 실행에 들어갔고, '주거와 수산업 교육, 일자리까지 연계한 패키지 지원' 처럼 예산, 제도개선 등에 시간이 필요한 39개의 과제는 종합대책에 반영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만간 열릴 세 번째 토크콘서트는 '6차 산업화를 통한 수산업·어촌부가가치 제고'가 주제다. 개최장소인 신안천사김은 한국 김 수출 역사상 단일 기업 최초로 김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대표 기업으로 김 수출 1위 기업이 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어촌공동체 상생의 대표 사례로 충남 서산 종리마을의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종리마을은 마을 특산물 '감태' 가공 시설을 유치한 뒤 마을 공동체에서 직접 생산·가공·판매 등을 전담해 안정적인 마을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다. 이번 사례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이 수산업·어촌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장관은 "청년들이 어촌과 연안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수산업·어촌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강원 양양에서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해양수산부

도 단순 수산물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 체험·관광, 수출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오늘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들을 잘 엮어서 이번 어촌·연안 활력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의·정, 깊어지는 불통의 시간...양측, 입장만 되풀이

의료계 '원점 재검토' 입장 반복 대학 상대로 금지 가처분 신청 추진 정부 "수용 불가" 대화 제안 멈춰

의·정간 대화가 단절된 '불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화 제안 자체를 중단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통일된 대안' 대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백지화만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추가로 내놓을 메시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제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사실상 내려놓은 단계다.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들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실질상 상실한 상황에 전공의들은 현재 산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병원 복귀 조건으로 박 2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욱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박 차관 경질 등을 요구한다는 인터뷰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제외한 대부분은 정부가 수용 불가능한 요구다. 정부는 전공의들과 대화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대화를 통해 일정 요구를 수용해도 전공의들이 즉시 현장에 복귀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대화 제안을 중단한 데에는 이런 배경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선현임시지도

부인 비대위와 차기 지도부인 임현택 회장 당선인 간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았다. 그나마 의·정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전국외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정 관계에 진전이 없자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은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이날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부디 대학, 그리고 교육자로서 본분을 생각하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 명은 22일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와 박단 위원장,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총 6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 중 4건을 각하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알펜시아 '인수 담합' KH그룹 과징금 510억

공정위 "자회사 입찰 들러리 세우 가격 공유하며 최종 낙찰 받아" 6개 계열사와 배상운 회장 고발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H그룹 소속 6개 업체인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510억4000만 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그리고 배상운 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알펜시아 자산 매각을 추진했다. 4차례의 공개경쟁입찰은 입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고, 이어진 2차례의 수의계

약 절차도 결렬됐다. 이런 상황에서 KH그룹은 5차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1차 입찰보다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공사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에서 입수하고,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결정했다.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인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후 이들은 5차 입찰 당일인 2021년 6월 사전 합의한 대로 각각 입찰에 참여해 투찰 가격을 공유하며 KH필룩스의 자회사인 강원개발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가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또한 가담 정보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KH필룩스 등 4개사와 배회장은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 中 과잉생산에…“美,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추진”

美, 中 저가공세 강경 대응 예정  
中 수출량 10년 만에 최대에도  
금액은 작년 10월 간신히 넘어  
WSJ “중국 기업 마진 압박 커”

중국 수출 2021년 12월 대비 증가율 (단위: %)



※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과잉생산이 자국 산업에도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중국의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를 둘러싸고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주 중국 방문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으며, 중국은 시진

핑 국가주석까지 나서서 반박에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피츠버그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특정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새로운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조선산업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공식 조사도 시작한다. 백악관 측은 “중국의 과잉생산과 관련된 불공정 수출로부터 우리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에서 “중국의 전기차와 태양광, 리튬전지 수출은 글로벌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했다”며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라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무역 보호주의 조치는 문제 해결에도움이 안 된다”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잉생산 문제는 중국 내에서도

역효과를 부르고 있다고 WSJ는 꼬집었다.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에 그쳤다. 이는 1~2월 기록했던 7%에서 크게 둔화한 것이다. 3월 수출 물량은 약 10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지만, 금액 측면에서는 지난해 10월 수준을 간신히 웃돌았을 뿐이다.

이는 중국 기업의 가격 결정력이 국내에서 약화하고 마진 압박이 가중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WSJ는 짚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설비 가동률 부분이다. 제조업 설비 가동률(공장 전체 생산량 대비 실제 생산량의 비율)은 73.8%로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을 받은 2020년 1분기를 제외하면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기차 등 중국 정부가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 가동률은 1분기 65%로 2020년 1분기를 제외하면 최근 저점인 2016년 중반의 69.1%보다도 훨씬 낮았다.

과잉생산을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수출에서는 금액 측면에서 더 강력한 기반을 찾지 못하고 내수도 취약한 상태를 유지되면 민간투자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WSJ는 경고했다. 정부나 국영은행이 부동산이나 인프라 부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제조업에서도 그간의 과잉 대출 관련 비용을 흡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중국이 값싼 수출품을 해외로 밀어내 인플레이션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부만 하다가는 제조업이 침체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동산과 같은 신세가 될 우려가 있다. 전이현 기자 cahyun@



사막 도시 두바이 ‘물난리’ 이집트(이집트) 두바이에서 17일(현지시간) 전날 내린 폭우로 순식간에 물에 잠긴 도로에 차들이 버려진 채로 있다. 두바이에서는 전날 단 12시간 동안 1년 강수량과 맞먹는 100mm의 비가 쏟아졌다.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내린 폭우로 일부 운전자들이 차를 버리고 대피해야 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국제공항 중 한 곳인 두바이 국제공항이 30분간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인근 오만에서는 폭우로 최소 18명이 숨졌다. 두바이(UAE)/AP연합뉴스

## “고금리가 경제부양” 월가 괴짜들 부상

금리 인상 시작 때보다 경기 호황  
저축·채권으로 상당한 수익 주장

월스트리트 일각에서 ‘고금리가 경제를 부양하고 있다’는 괴짜 비주류 경제이론이 확산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침체는 커녕 예상과는 달리 호황을 누리고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통상 금리가 오르면 저축이 증가하고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흡수돼 경제 성장이 둔화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경제가 활황을 띠면서 월가 일각에서는 ‘고금리 덕분에 경제가 호조세를 띠고 있다’는 파격적인 이론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들의 논리는 이러하다. 기준금리가 0%대에서 연 5.25%~5.50%로 22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미국인들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채권 투자와 저축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됐다. 그리고 미국 기업과 사람들이 새롭게 얻은 현금의 상당 부분을 수요와 성장을 촉진하는 데 소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RBC캐피털마켓의 파생상품 트레이더를 지내고 현재 ‘매크로투어스트’라는 투자 뉴스레터를 발

행하는 케빈 뮌어는 “현실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미국 정부 적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반대급부로 사람들의 추가 수입이 늘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정부 부채가 10년 전의 두 배인 35조 달러(약 4경8510조 원)로 늘면서 고금리 환경 속에 미국과 해외 채권 투자자의 주머니로 유입되는 추가금액이 매일 500억 달러 정도에 이른다고 블룸버그는 부연 설명했다.

물론 주류 학계와 금융계에서는 고전 경제학과 반대되는 이 급진적인 이론을 대부분 외면하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최근의 경제적 증거로 인해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실업률, 기업 실적 등 주요 지표를 살펴봤을 때 현재의 경기 확장세가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시점보다 비슷하거나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GDP 성장률은 금리 인상 시작 직전 2분기 평균이 2.5%였으나 최근 4.2%로 확대됐다. 실업률은 3.8%로 유지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순이익은 3조 달러(약 4157조4000억 원)에서 3조4000억 달러로 늘었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급진적인 이론에 대해 “근거가 없다”면서도 “높은 금리가 과거보다 경제적 피해를 덜 주고 있다”고 인정했다. 변호선 기자 hsyun@

## 테슬라, 성장 둔화의 덫… 주가 고점 대비 60% 낮아

1분기 車 인도량 8.5% 줄고  
중국산 가격경쟁에 마진 악화  
전세계 인력 10명 중 1명 감원

테슬라 주가(단위: 달러) ※ 출처: CNBC



미국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가 성장 둔화의 덫에 걸렸다. 대규모 감원에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불안이 커지면서 주가가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전날 5.6%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2.7% 미끄러진 157.11달러(약 21만7600원)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11월 도달한 최고점 대비 약 60% 낮은 수준이자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말 7900억 달러에 가까웠던 시가총액은 장중 5000억 달러를 밑돌기도 했다.

1분기 주가 하락 폭은 29%에 달한다. 이는 2022년 4분기 이후 최악이자 2010년 뉴욕증시 상장 이래 세 번째로 부진한 성적이다. 이날까지 테슬라 주가는 올해 여약 37% 하락했다.

전날 테슬라는 비용 절감을 위한 대규모 인력 감축 소식을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전 세계 인력의 10% 이상을 감원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내가보다 더 싫어하는 일은 없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2018년에도 전체 직원의 9%를 해고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금과 달랐다. 당시 비용 절감 및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가 3% 이상 올랐다. 2022년에도 정규직 직원의 약 10%를 해고한다는 소식이 주가가 9%대 급락했지

만, 머스크 CEO가 “정규직 직원 수는 줄지만, 비정규직은 늘어 전체 직원 수는 비슷할 것”이라고 해명하자 금방 회복했다. 현재 테슬라가 처한 상황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1분기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8.5% 줄어 코로나 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중국에서는 비야디(BYD)와 샤오미 등의 경쟁 업체가 매섭게 따라붙고 있다. 지난해 중국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 무리하게 뛰어들면서 마진도 악화하고 있다.

자산관리사 뱌워터의 더그 클린턴 파트너는 “테슬라의 상황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쯤 지난 몇 분기 동안의 전기차 수요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 테슬라가 수요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저가형 전기차 ‘모델 2’를 만들지 또는 자율주행 기술인 ‘풀 셀프 드라이빙(FSD-Full Self-Driving)’의 가격을 낮출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전이현 기자 cahyun@

## 中, 러시아 수출 급감…양국 관계 이상 신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에도 밀착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서방의 거듭되는 견제에 이상 신호를 보인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해관총서를 인용해 3월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약 16%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22년 중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만 해도 양국은 석유와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활발한 움직임에 힘입어 2400억 달러(약 332조 원)라는 기록적인 규모의 교역을 이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한 혐의를 받은 은행과 기업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위협이 커지면서 중국도 러

시아와의 거래를 조심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삼국 기업 등에 가하는 제재를 뜻한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은행과 수출업체들이 러시아의 군사력을 강화한다면 미국의 제재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알렉산더 이사코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러시아와 관련한 2차 제재 위협에 대해 더 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러시아 수입업체들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점점 더(중국을 대신해) 중앙아시아 국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대한민국 프리미엄 자산관리  
KB GOLD & WISE *the* FIRST  
4월 22일 반포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KB금융 최고 전문가들의  
특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경험해 보세요



KB GOLD & WISE *the* FIRST 특별한 자산관리 서비스

세무 | 투자 | 부동산 | 신탁 | 금융자문 | 법률자문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 서비스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766호(2024.04.12.), 유효기간 2024.04.12.~2024.12.31.까지

# 전기차올림픽 서울서 개최... “혁신 모빌리티 기술 뽐낸다”

## ‘EVS37’ 23~26일 코엑스에서

세계 전기차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37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 ‘EVS37’이 한국에서 개최된다.

EVS37 조직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EVS37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12개국 160여 개의 글로벌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참여해 550개의 부스를 마련한다.

EVS37은 세계전기자동차협회(WEVA)와 아시아태평양전기자동차협회(EVAAP)가 주최하고 한국자동차공학회(KSAE)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전기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다. 글로벌 모빌

글로벌 160여개 기업들 참여  
한국 3번째 개최...신기술 공유

현대차·기아 ‘PBV’ 기술 선봬  
KGM ‘토레스 EVX’ 3종 공개  
현대모비스 ‘모비온’ 국내 첫선

리업계관계자들이 출출동해 신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를 뽐내는 자리로 전기차 올림픽으로도 불린다.

EVS 행사는 매년 아시아, 유럽, 북미 등 3개 대륙에서 매년 순환 개최된다. 한국에서 열리는 건 2002년 부산, 2015년 경기 고양 개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선우명호 <사진>  
EVS37 대회장 겸 세계전기자동차협회장은 “이번 EVS 서울 대회가 가장 혁신적인 전기차 기술력의 경쟁 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전기차뿐 아니라 배터리를 선도하는 여러 국내의 기업이 대거 참석해 고도의 기술력을 뽐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EVS37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전시에는 한국(63%)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며 유럽(21%), 중국 및 아시아(12%), 미주(4%) 등 글로벌 기업 의 참여가 예고됐다.

선우대회장은 “글로벌 톱6 배터리 제조

사에 한국의 3사, 2024년 전기차 시장점유율 톱3 진입이 확실시되는 현대차그룹의 노력이 축적돼 이미 대한민국은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부상했다”며 “EVS37 대회는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현대차·기아는 최첨단 목적기반 차량(PBV) 기술과 차세대 기능을 갖춘 전기차를 선보인다. KGM모빌리티(KGM)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토레스EVX 레저용과 화물밴 등 3종을 공개한다. 현대모비스는 ‘CES 2024’에서 선보였던 실증차 ‘모비온’을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다.

EVS37에서는 40여 개국 석학과 전문가 1500명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도 열린

다. 학술대회에서는 28개국에서 제출된 318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동희 현대차·기아 R&D본부 전동화시험센터장(전무)과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사장의 기조강연도 열린다.

글로벌 석학들이 모여 전기차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전기차 테크 서밋’도 열린다. 배터리 분야 석학 아흐마드 페시란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박사와 전고체 배터리 최고 권위자인 셸리명 시카고대 석좌교수 등이 참석해 전기자동차의 한계로 지적되는 ‘열폭주’ 관련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우 대회장은 “이번 대회는 일반인 참가 신청자가 1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 한중희 “AI접목 가전 하반기 웃을 것”... 류재철 “3년 내 빌트인 1조 매출”

<삼성전자 부회장>

<LG전자 사장>

## 삼성·LG 伊 유로쿠치나 참가

한 “초연결성, 소비자 호응할 것”  
큰 디스플레이 탑재한 주방 제시  
류 “초프리미엄·중저가” 투트랙  
양사, AI가전으로 유럽시장 공략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유로쿠치나(EuroCucina) 2024’에서 유럽 시장을 공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중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연설에 인공지능(AI)을 더한 ‘초연결성’, 류재철 LG전자 사장은 초프리미엄과 볼륨존(중저가)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한 부회장은 16일(현지시간) 진행된 현지 간담회에서 “생활가전(DA) 사업부가 아직 1등을 못 하고 있지만, (TV와 휴대전화) 후광을 받고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연결 경험을 주면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전 사업이 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회사처럼 이렇게 많은 제품을 만드는 곳이 없다. 애플도 가전은 안 하고, LG도 휴대폰 사업을 접지 않았느냐”



한중희(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주방 가전·기구 전시회 ‘유로쿠치나 2024’를 찾아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왼쪽 사진). 류재철 LG전자 H&A 사업본부장(사장)이 같은 날 ‘유로쿠치나 2024’ 전시회에서 LG빌트인 가전을 소개하고 있다.

며 “연결을 잘하면 애플도 겨워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전통 생활가전강자들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유럽에서 AI 기반 연결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는 ‘유로쿠치나 2024’에서 참가 기업 중 두 번째로 큰 964㎡(약 292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했다. AI 기술이 접목된 주방 혁신으로 전시 분야를 확대하고 다양한 멀티 디바이스 경험을 소개했다.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제품

들을 통해 새로운 주방의 모습을 제시했다.

특히 7월에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생성형 AI를 도입한 빅스비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빅스비는 사용자가 음성 명령을 하면 다양한 주변 기기가 이를 인식하고 다른 기기에 전달하는 식인데, 생성형 AI를 도입하면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음성 제어까지 가능해진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올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스포크 AI 가전 라인업의 연결성을 더 고도화할 수 있을



류재철 LG전자 H&A 사업본부장(사장)이 같은 날 ‘유로쿠치나 2024’ 전시회에서 LG빌트인 가전을 소개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류재철 LG전자 H&A 사업본부장(사장)이 같은 날 ‘유로쿠치나 2024’ 전시회에서 LG빌트인 가전을 소개하고 있다.

것으로 기대한다.

LG전자도 약 80조 원에 달하는 전세계 빌트인 시장에서 LG전자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7년까지 글로벌 빌트인 사업에서 1조 원을 매출 달성성을 시작으로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류 사장은 이날 전시장에서 “3년 이내에 빌트인 사업을 조 단위로 만들어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전시도) 빌트인 사업에 준비된 플레이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

위해 빌트인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실제 LG전자는 AI 끊음 알람과 조리기구 추적 기능을 탑재한 ‘프리존’ 인덕션, AI 카메라를 내장한 오븐 등 최신 빌트인 주방가전 솔루션을 공개하는 데 집중했다.

류 사장은 “유럽 시장은 AI 기능으로 더 편리한 제품이 등장하면서 올해 또 한번의 성장 모멘텀을 맞았다”며 “북미 시장에서 이뤄낸 빌트인 사업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 중진공, 올 정책자금 5.4조 투입... R&D 감액 기업 4300억 보전

창업기 기업에 2조4300억 최대  
혁신성장 지원 비중 36.9%→40%  
청년전용창업자금 3000억 공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5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창업기 기업에 2조43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4300억 원을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사업비가 감액된 기업에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조건부용자 제도도 신설했다.

중진공은 17일 ‘2024년 기업금융 지원 사업 중점 추진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밝혔다.

중진공의 정책자금 크게 창업기, 성장

기, 재도약기로 나뉘어 집행된다. 창업기(혁신창업사업화)에 2조4300억 원, 성장기 기업에 2조1400억 원, 재도약 기업엔 5300억 원을 지원한다.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인 긴급경영안정 지원 등을 더하면 올해 정책자금 규모는 총 5조3900억 원이다.

김문환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현재 정책자금으로 연간 2만 곳을 지원하고 그간 총 8만 개사에 혜택을 제공했다”며 “은행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 재도약·재창업 기업 등에서 정책금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영위 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투입한다. 혁신성장 분야의 지원 비중은 지난해 36.9%에서 올해

40%까지 확대한다. 또 청년전용창업자금 공급 규모를 지난해 2500억 원에서 올해 3000억 원으로 늘려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투자조건부용자 제도도 신설했다. 투자기관으로부터 선투자를 받았거나 투자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신주 인수권을 받고 대출을 하는 방식이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내 50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투자조건부용자는 실리콘밸리에서 활용되던 제도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비슷한 상품을 운용 중이지만, 실리콘밸리의 성공 모델을 가져온 건 중진공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취약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유동성을 공급한다. 특히 이차보전 사업에 총 4300억 원을 투입한다. 전체 대출 규모로 보면

9300억 원이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낮은 정책금리로 금리 차이를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성장지원에 108억 원 △제조현장스마트화에 67억 원 △Net-Zero 유망기업 27억 원 △수출기업 글로벌화에 111억 원 △개발기술사업화에 120억 원을 공급한다. 특히 올해 R&D 예산 감액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개발 기술사업화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에 5.5%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된다. 전체 대출 규모로 보면 4300억 원에 이른다.

또 재창업자금 규모를 전년 750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원 일부를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으로 운용해 재기환경 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HD현대중, 함정 6406억 수주

HD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와 총 6406억 원 규모의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페루 리마의 해군클럽에서 진행된 계약 서명식에는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 부사장,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령을 비롯해 월터 아스투디오 차베스 국방장관, 루이스 호세 폴라르 피가리 해군사령관, 최종욱 주페루 한국대사,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계약에 따라 3400톤(t)급 호위함 1척, 2200톤급원해경비함 1척 및 1400톤급상륙함 2척을 현지 조선소에서 공동 건조한다.

HD현대중공업은 시마조선소와 협력해 2029년까지 함정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 삼성 “세상에서 가장 빠른 D램… 차세대 AI 반도체 선도”

## 저전력 LPDDR5X 개발 성공

삼성전자가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향후 2~3년 안에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되찾겠다고 공언한 만큼 고성능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고 동작 속도를 지원하는 10.7기가비피에스(Gbps) 저전력 더블데이터레이트(LPDDR) 5X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LPDDR은 저전력(Low Power)에 특화 설계된 D램이다. 주로 스마트폰·태블릿 등 전력 효율성이 중요한 IT 기기에 탑재된다.

이번 신제품은 12nm(나노미터·10억분의 1m) LPDDR D램 중 가장 작은 칩으로 구현한 저전력·고성능 메모리 솔루션이다. 전세대 제품 대비 성능과 용량이 각각 25%, 30% 이상 향상됐다. 또한 성능

성능 25%·용량 30% 이상 향상

온디바이스 AI 시장 급성장에  
저전력·고성능 LPDDR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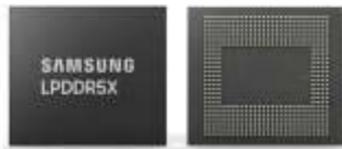
AI 가속기 ‘마하-1’ 내년 양산

5세대 이어 6세대 HBM 준비 중

과 속도에 따라 전력을 조절하는 ‘전력 가변 최적화 기술’과 ‘저전력 동작 구간 확대 기술’ 등을 적용해 전세대 제품보다 소비전력을 약 25% 개선했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LPDDR5X D램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모바일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 검증 후 하반기 양산할 예정이다.

최근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



삼성전자 LPDDR5X. 사진제공 삼성전자

는 만큼 고성능 LPDDR D램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옵디아에 전 세계 모바일 D램 용량 수요는 지난해 676억기가비트(Gb)에서 2028년 1259억Gb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 역시 123억 달러에서 263억 달러로 약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삼성전자는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제품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2018년 세계 최초로 8Gb LPDDR5 D램을,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LPDDR5X D램을 개발한 바 있다.

배용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실장 부사장은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LPDDR D램의 응용처가 기존 모바일에서 서버 등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가오는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PDDR D램 외에도 삼성전자는 AI형 고성능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말쯤 AI 가속기 마하-1 제작을 완료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양산한다. 마하-1은 거대언어모델(LLM) 추론에 최적화된 반도체다.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간 병목 현상을 8분의 1로 줄이고, 파워 효율은 8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가격이 엔비디아 제품의 10분의 1인

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향후 엔비디아 제품을 대체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 사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마하-1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생각보다 더 빠르게 마하-2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뒤쳐졌다고 평가받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업계 최초로 12단 HBM3E(5세대 HBM) 개발에 성공하고, 현재 엔비디아의 평가 작업을 받고 있다. HBM4(6세대)도 2026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경 사장은 “(HBM은) 전담팀을 꾸미고, 정성을 다해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HBM의 리더십이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 박상규 SK이노 사장 “사업 점점 마무리되면 성과 확신”

### 2월부터 임직원 릴레이 워크숍 ‘전략적 방향성·혼연일체’ 강조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임직원들과 만나 “조만간 포트폴리오 점검이 마무리되면 성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박 사장은 2월 팀장급인 PL(Professional Leader) 워크숍을 시작으로 주니어급 직원으로 구성된 소통조직(iCON·Innovation Communication ON) 및 임원들과 릴레이 워크숍을 갖고 있다.

박 사장은 임직원과의 자리에서 “올 초부터 SK이노베이션 계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트폴리오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방침이 마련되면 공유하는 자리를 갖겠다”면서 “전략적 방향성은 맞다는 확신이 있고, SK이노베이션에는 기술력과 인재가 있는 만큼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광진구 위커희호텔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 PL 워크숍에서 그는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임직원 대상 릴레이 워크숍에서 경영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SK이노베이션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전기차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기후 위기와 전기화 등에 비춰 전기차로의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예정된 미래”라며 “이럴 때일수록 SK온은 가격, 기술력, 품질, 고객관리, 좋은 기업문화와 인재 등 5가지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 사장은 “기업경영은 5~10년 앞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면서 “SK그룹의 주력 사업이 된 석유·화학도 힘든 시기를 거쳤고, ‘카본 투 그린’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 직면한 어려움에 너무 소극적이지 말고 패기와 용기를 갖고 돌파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임원 워크숍에서도 “SK온과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그린테크 사업은 마라톤으로 치면 35km 지점쯤에서 오르막

을 마주하고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며 “오르막 상황에서는 다른 경쟁자들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사업에 대해선 운영 최적화를 통한 비교우위 확보를 주문했다. 박 사장은 “석유사업은 경기 사이클이 존재하고, 화학사업은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격 경쟁력과 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은 적어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등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진행된 릴레이 워크숍에서는 SK 특유의 기업문화인 ‘SKMS(SK경영관리체계)’를 강조했다.

박 사장은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은 당시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로 여겨졌던 ‘섬유에서 석유까지’라는 수직계열화를 10여 년이 넘게 고수한 끝에 마침내 이뤄냈다”며 “SK그룹이 SKMS를 기반으로 위기 때마다 퀀텀점프를 해왔던 것처럼 SK이노베이션 최고경영진으로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aporlune@

## 비상경영 돌입한 삼성그룹 순계열사 임원 주6일 근무

### 전자 계열 이어서 자발적 동참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주 6일제 근무에 나선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속에 설상가상으로 중동발 리스크 등이 이어진 데 따른 비상경영 차원이다.

17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계열사 임원들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주 6일 근무를 하기로 했다. 삼성 임원들은 잡아 놓은 주말 약속을 취소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원 및 개발부서 임원의 절반 정도가 이미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임원들도 동참한다. 다른 계열사 임원들도 역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등 설계·조달·시공(EPC) 3사 일부 임원들도 올해 초부터 주 6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었다.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들 역시 주 6일 근무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은 주 6일 근무에 나서지만, 부장급 이하 직원들의 ‘동반 출근’은 엄격히 금지된다.

삼성 관계자는 “전자를 중심으로 임원들 일부가 자발적으로 이미 6일 근무제를 시행해왔다”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 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계열사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홍영호(왼쪽 두 번째부터) LS머트리얼즈 대표·구분구 LS전선 대표 등 관계자들이 17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하이엔케이 EV 알루미늄 부품 공장 착공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LS머트리얼즈

## LS머트, 구미 EV부품공장 착공… 내년 양산

LS머트리얼즈는 자회사 하이엔케이(HAIMK)가 17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차(EV)용 알루미늄 부품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장은 내년 1분기부터 EV 약 30만 대

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케이스 부품 등을 양산한다. 하이엔케이는 LS머트리얼즈와 EV용 알루미늄 부품 글로벌 1위인 오스트리아 하이(HAI)사가 2023년 설립한 합작사다. 송영록 기자 syr@

## 獨매체 “아이오닉6, 장거리 주행 완벽”

### 전기차 전문지 일렉트릭 드라이브 주행성능·승차감 등 6개항목 만점

현대자동차는 독일 ‘일렉트릭 드라이브’의 전기차 장거리 주행 평가인 ED1000에서 아이오닉6(사진)가 종합평점 5점 만점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일렉트릭 드라이브는 격월로 발행되는 독일의 전기차 전문 잡지다. 이번 아이오닉6 장거리 운행 평가에서 일렉트릭 드라이브는 2주간 총 2000km를 실제 도로 상황에서 테스트하며 아이오닉6의 디자인, 실내 공간, 주행 성능, 충전 성능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항속 거리, 충전 속도, 주행 성능, 승차감, 품질, 편의 사양 등 총 6가지 항목을



평가해 종합 평점 5점 만점을 획득했다.

일렉트릭 드라이브는 아이오닉6에 대해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전비(항속 거리)와 충전 성능은 구매에 결정적인 요소”라며 “아이오닉6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뛰어나고 소비자들에게 후회없는 선택이 될 완벽한 전기차”라고 평가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 현대글로벌비스 400억 원 규모 스마트물류시스템 공급 계약

현대글로벌비스는 최근 한국초저온, 예코프로씨엔지와 약 400억 원 규모의 스마트물류솔루션 시스템 공급 계약을 연이어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솔루션은 미래 신규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분야다.

현대글로벌비스 관계자는 “물류 컨설팅 노하우에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류 자동화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 헌재서 본안 심리... '중처법' 위헌 여부 결정 빨라지나

“법 적용 유예 촉구” 호소에  
헌재, 직접 위헌성 가리기로  
첫 심리... 업계 기대감 커져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 소원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앞두고 중소기업계는 적용 유예를 촉구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1월 27일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에도 중소기업계는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에서 수천 명이 결집해 절박함을 호소했다.



1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국회의 외면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재에 직접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처벌과 관련해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인 305명이 771만 중소기업을 대신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하

면서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재 본안 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

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엄윤령 변호사는 “헌재에서 이번 청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이 제대로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서 제공해 헌재가 현재 상황을 단지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더 생생히 이해할 수 있게 조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안은 결정이 미치는 파장이 커 헌재가 굉장히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관들이 우리나라 입법 내력, 외국 사례 등을 철저히 살펴보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이 수사 중, 재판 진행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기술가치투자 이제 퍼트려(PTR)! SK증권 PTR랩**

SK증권

**PTR : 주가기술비율(Price Technology Ratio)로 성장사가 보유한 특허가치를 주가와 비교하는 지표임. PERO나 PBR처럼 기술가치대비 주가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 투자자는 랩 계약에 대하여 SK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이 랩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이 랩 계약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가입하시기 전에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철저히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랩 계약의 선취수수료는 없으며, 운용보수 연 1.5%(분기별 0.375% 추계), 성과보수는 고객과 별도 협의로 매매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921-05246호  
1302.11.19 - 2022.11.7일  
99대권 은행당사인 심사제 제29-901호  
13023.11.19 - 2026.11.18

## 어느 공간에서나 자유롭게 배치 '코웨이 정수기' 호텔 러브콜 쇄도

국내 고급호텔 대량 공급 박차  
ESG 맞춤 솔루션 경쟁력 확보

코웨이는 정수기 공급과 관련해 국내 다수 호텔로부터 파트너십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월 르메르디앙&목시 서울 명동에 나노정수미니 정수기 405대를 설치한 데 이어 3월에는 코트야드메리엇 서울 타임스퀘어 전 객실에 287대의 정수기를 설치했다. 글로벌 체인인 메리엇 계열의 호텔과 국내 대형 리조트 회사와도 계약을 체결하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같은 수주는 최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호텔들의 고민이 늘면서 코웨이가 먼저 솔루션을 제안해 이뤄졌다.

그간 호텔에선 제품 설치 시공과 객실 인테리어 저해, 위생 관리 등의 문제로 정수기 설치가 쉽지 않았다. 코웨이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우려를 해소했다. 호텔 객실에 고객이 투숙하지 않으면 전기가 차단되는 점을 고려해 무전원 방식의 공간 활용성이 높은 슬림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여기에 기업 간 거래(B2B) 고객을 관리하는 별도의 전문 조직을 기반으로 호텔 요구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안했다.

특히 코웨이는 솔루션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 명동 호텔에 설치된 코웨이 나노정수 미니 정수기. 사진제공 코웨이

약한 달간 호텔 투숙객의 사전 평가와 호텔 고객사를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진행했고,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업계 최초로 5성급 호텔 전 객실에 정수기를 공급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고객 평가에서 코웨이 정수기의 높은 인지도는 물론 생수병 대신 정수기를 이용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며 “호텔은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줄여 ESG 경영을 실천하고, 고객들에게는 더 편안한 객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다양한 여러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과케어 솔루션을 제안하며 B2B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점을 보유한 은행, 유통사 등 50여 개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코웨이의 주력 제품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와 비렉스안마 의자 등이 B2B 시장에서 수요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B2B 시장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주요국 'AI거버넌스' 속도 내는데... 첫발도 못 댄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 관련법을 제정하며 AI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다. 국가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며 'AI민족주의'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입법 공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서둘러 AI 기본법을 통과시키고 국제적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의 'AI 인덱스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입법 절차에서 AI에 대한 언급은 217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AI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들이 AI 거버넌스를 확립하려는 모습이다.

AI 인덱스 2023 보고서에 따르면 AI 규제 도입에 활발한 건 미국이다. 미국 규제 당국은 지난해 25개 AI 관련 규정을 통과해 신기록을 경신했다. 2016년 당시 1건에 불과했던 AI 관련 규제는 생성형 AI의 데이터 저작권 지킴, 사이버



2023년 주요국 AI 규제

| 일       | 국가   | 규제 내용                  |
|---------|------|------------------------|
| 1월 10일  | 중국   | 딥 합성 규제 도입             |
| 3월 22일  | 미국   | 미국 의원들, 국가보안법 AI 발의    |
| 5월 11일  | 미국   | AI 리더십 교육법 시행          |
| 7월 25일  | 미국   | 자본수출국 투명성법 통과          |
| 8월 15일  | 중국   |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 시행 |
| 10월 30일 | 미국   | 조 바이든 대통령 AI 행정명령 발표   |
| 12월 9일  | 유럽연합 | EU AI법 합의 도달           |

**美, 지난해 25개 AI 규제 도입 EU는 세계 첫 'AI규제법' 입법**

보안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등을 포함한다. 다만 자국 AI 개발 기업이 많은 미국은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은 담보하되 AI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무른 규제를 적용한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건 EU다. EU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과 유럽 의회 협상단이 EU AI 법률안의 절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이후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입법했다. 미

**韓, 야당·시민단체 반발 부딪혀 'AI기본법' 1년째 국회 계류 중**

국과 더불어 세계 2대 소비 시장인 EU는 AI 개발 기업이 없는 만큼 강한 규제에 경쟁력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AI 입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국회서 1년째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부의 핵심 입법 과제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시민단체

**전문가 "글로벌 규제 대응 필요 21대 국회서 AI기본법 처리를"**

의 반발 등에 좌초됐던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균형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을 거란 관측이다.

AI 기본법은 국가의 AI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법안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AI의 발전과 이용 및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 가 아니라, 대중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시키며 AI의 발

전과 진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날 과기정통부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에서 오병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AI 규제에 관한 일반법으로 위험 기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인공지능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만의 AI 일반법을 마련해 AI 발전 강국으로서 국제적 논의를 끌고 가는 입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내달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AI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가 (AI)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각 국가별 이해 관계에 따라 각 국에 유리하게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한다"며 "5월 우리나라에서 AI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여기에서 진행된 내용이 UN에서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한글과컴퓨터>

## 김연수 대표 '선택과 집중' 라이프케어 팔고 AI 키운다

김연수 한글과컴퓨터(한컴)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한글과컴퓨터 AI 사업 전략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글과컴퓨터

한글과컴퓨터(한컴)가 연결자회사 한컴라이프케어 매각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풀이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컴그룹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 파트너인베스트먼트로 구성된 한컴 컨소시엄은 개인안전장비 업체 한컴라이프케어 지분 7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한컴은 지난해 말 기준 한컴라이프케어 36.13%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BDA파트너스가 매각 주관을 맡아 잠재적 인수 후보들에게 매각 개요가 담긴 티저레터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매각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1600억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컴이 연결자회사 한컴라이프케어 매각하기로 한 것은 AI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기 위한 김연수 대표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김대표는 2021년 대표이사직에 오른 이후 계열사 정비를 통한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한컴MBS를 포함한 11개 계열사를 매각해 10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

**'라이프케어' 지분 70% 매각 결정 지분 매각가 1600억 이상 전망 AI중심 포트폴리오 강화 나설 듯**

**金, 계열사 정비 통한 체질개선 '글로벌 빅테크 진화' AI 승부수**

이후 보유한 실탄을 바탕으로 AI 사업 중심으로 투자와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컴은 올해 초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42Maru) 투자에 참여했으며, 전자문서업체 클럽소프트를 인수했다. 지난달 말에는 스

페인 AI 생체인식 기업 페이스피(FacePhi)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이번 한컴라이프케어 매각이 완료되면 추가 실탄이 확보되는 만큼, 김대표의 투자-인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컴 관계자는 "한컴라이프케어 매각 검토 배경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는 한컴의 중장기 비전 달성을 위해 AI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더욱 공격적으로 AI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대표는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문서 회사'에서 벗어나 5년 내 '글로벌 빅테크'로 진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2024년은 한컴의 AI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지능형 자동화 시장에서 영역을 빠르게 확대해 5년 이내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편입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SKB, 양자 암호화한 '드론 4K영상' 실시간 전송

국방·치안 분야 등 활용 기대

SK브로드밴드는 업계 최초로 양자보안기술을 활용한 '드론 4K 영상' 실시간 전송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 드론 제조사인 파인비티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해 2월 남극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4K 암호화 영상을 실시간 전송하는 실증 작업을 마쳤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양자 기술 사업화 발굴 및 실증사업 중 하나다. 해당 사업은 양자보안기술, 양자센싱, 양자컴퓨팅 등 양자기술 원리가 적용된 기술, 장비, 서비스를 개발하는 국책과제다.

이번 남극 실증은 세종기지 주변 생태 환경을 드론이 촬영 및 탐사 형태로 이뤄졌다. 양자보안기술이 적용된 드론이 촬영한 암호화된 4K 영상을 실시간 전송할 수 있어 피아 식별과 위치 추적, 보안이 핵심인 국방, 치안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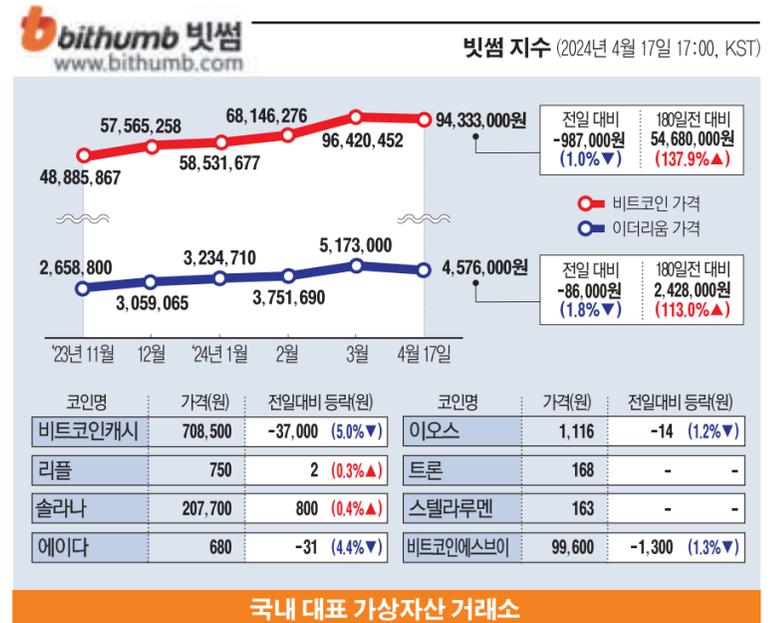
이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실



SK브로드밴드가 남극에서 양자 암호화 드론의 4K 영상 실시간 전송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제공 SK브로드밴드

증에 앞서 보안기업 케이씨에스와 협력해 '국가정보원 암호모듈 검증 프로그램(KCMVP)' 인증을 획득했고, '양자암호원집'까지 탑재해 보안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최승원 ICT 인프라 담당은 "국책사업 2년차 진행을 통해 양자기술 기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 발굴과 고도화로 상용화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시대에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최적의 보안 서비스가 필요한 공공·의료·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맞춰 기술 개발과 솔루션 제공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기회의 땅, 중남미 잡아라”... K-제약·바이오 ‘종횡무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대표 제품을 들고 중남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남미 의약품 시장 규모는 한국의 2배에 달하고, 고령화 등으로 가파른 성장폭을 보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파트너사와 함께 현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령은 최근 멕시코에서 ‘듀카브플러스’ 출시를 위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듀카브플러스는 보령이 개발한 고혈압약 ‘카나브’에 기반을 둔 고혈압 복합제다. 보령은 지난해 현지파트너사 스텐달과 멕시코에서 듀카브플러스 발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보령은 10년 전부터 중남미 시장에 공을 들여왔다. 멕시코에는 2014년 현지 제품명 ‘아라코’로 카나브를 출시했다. 이어 2016년 카나브플러스(디아라코), 2019년 듀카브(아라코듀오), 2020년 투베로(아라코 프레) 등을 차례로 진출시켰다. 이번 듀카브플러스 허가가 성사되면 현지에서 카나브 패밀리 라인업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다.

대웅제약도 자체 개발 신약으로 중남미 시장에 발을 들였다. 15일 멕시코 의약품

##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남미 진출

※ 출처: 각사

|   |  |   |         |
|---|--|---|---------|
|  |  |  |         |
| 진출 국가   |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25개국  | 멕시코, 에콰도르, 칠레 등   | 멕시코, 페루 |
| 대표 제품   | 카나브  | 나보타, 펙수클루   | 케이캡     |
| 현지 파트너  | 스텐달  | 프로바이오메드   | 카르노트    |

### 보령, 중남미 진출 10년 공들여 ‘듀카브플러스’ 멕시코 허가 임박

당국에 당뇨병 치료 신약 ‘엔블로’의 품목 허가신청서(NDA)를 제출했다. NDA에는 국내 임상 자료를 활용해 현지에서 별도의 임상도 수행하지 않으며, 내년까지 정식 출시가 목표다. 대웅제약은 제품 출시 준비를 위해 지난해 현지 기업 목사8과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신약 ‘펙수클루’에 대해 멕시코, 에콰도르, 칠레 등에서 품목

### 대웅, 위식도질환 신약 ‘펙수클루’ 멕시코·에콰도르·칠레 출시 눈앞

허가를 얻어 출시를 준비 중이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개발한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현재까지 한국과 필리핀 등 2개국에 출시됐다. 대웅제약 대표 제품 중 하나인 보툴리눔 독신 ‘나보타’는 2015년 프로바이오메드와 파트너십을 맺어 멕시코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2020년엔 브라질에서도 허가를 받아 중남미 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 HK이노엔, 대표 치료제 ‘케이캡’ 멕시코·페루 이어 칠레 진출 앞뒤

있다. HK이노엔은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을 앞세워 중남미 시장에 공략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해당 계열 약물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켜왔다. HK이노엔은 올해 2월 칠레 공중보건청 산하 국립의약품청(ANAMED)으로부터 현지 제품명 ‘키캡(Ki-CAB)’으로 품목허가를 획득

했다. HK이노엔은 2018년 중남미 지역 기업 인카르노트와 케이캡정 완제품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중남미 진출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5월 멕시코, 10월 페루에 각각 케이캡을 출시했다. 앞서 2022년에는 브라질 대형 제약사 유로파마와 기술수출 계약도 성사시켰다.

주요 제약사들이 중남미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도 높아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료를 보면 중남미 의약품 시장 규모는 연간 72조 원에 달해 국내(29조8595억 원)의 2배 이상이다. 중남미 지역의 의약품 수요가 증가세인 만큼, 현지에 진출한 K-제약·바이오기업들의 난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운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중남미 시장은 의약품 수요에 비해 ‘빅파마’로 꼽을만한 기업이 없고, 연구개발 인프라도 부족하다. 자체 생산 역량도 다소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한국 기업들에 기회가 상당히 많은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성주 기자 hsj@

## 반지 혈압기 휴대용 초음파기 ... IT기업 뺨치는 제약사들

국내 제약사들이 기존 의약품 사업과 시너지가 큰 의료기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의료기기에 접목할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기반으로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편두통 완화 웨어러블 기기 ‘솔루메다-M’을 전량 출시했다. 이마에 붙여 사용하는 ‘솔루메다-M’은 이마 주변에 있는 삼차신경에 미세전류를 자극해 신경조절작용을 일으켜 편두통 완화와 발병빈도를 감소하는 기전이다.

전자약 연구개발 기업 뉴아인이 개발한 제품으로 동아제약이 지난해 국내 독점 판매 공급계약을 맺었다. 미국 식

품의약품(FDA), 유럽 CE(통합인증) 의료기기 인증과 국제표준인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인 ISO13485를 획득해 효과와 안전성 검증도 마쳤다. 동아제약은 앞서 2022년 여성 갱년기를 자가 진단하는 ‘이체코 갱년기테스트기’를 내놔, 지난해 12월엔 질 세정기이자 융복합의료기기인 ‘지노렉스페미니 이너밸런스’를 선보였다.

대웅제약은 센서 부착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연속혈당측정기’를 2020년부터 판매 중이며, 지난해에는 손가락에 착용하면 24시간 혈압 측정이 가능한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BP(CARTBP)’를 출시했다. 카트BP는 대웅제약이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 고령화에 의료기기 시장 급성장 유통망 등 기존사업과 시너지 커

### 동아제약, 편두통완화 의료기기 대웅제약은 반지형 혈압 측정기 보령도 휴대용 무선초음파 선포

있는 세계 최초 유일한 반지형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로, 디지털헬스케어스타트업 스카이랩스가 개발했다. 대웅제약은 3년간 국내에서만 누적 700억 원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한다.

보령은 지난해 힐세리온과 휴대용 초음파 ‘소노 500L(SONON 500L)’에

대한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달부터 전국 신장내과 진료현장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소노 500L은 힐세리온에서 개발한 임상진단용 무선 초음파 기기로, 이동이 불편한 기존 대형 유선 초음파 기기에 비해 편리하고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보령은 “의료데이터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확인할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단 것이 장점”이라며 “투석환자의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제약사들의 의료기기 사업 확대는 기존 의약품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어서다. 이미 구축한 유통망을 통해 의료

기기를 판매할 수 있고, 해당 질환 의약품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같이 판매하면서 얻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이유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집계를 보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8년 6조8179억 원에서 2022년 11조8782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지난 10년간 한국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59%의 초고속 성장을 달성했다. 여기에 AI와 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에 힘입어 의료기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상우 기자 nswreal@

## “바이오 혁신기술 한눈에”... ‘바이오코리아2024’ 내달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기술 미래를 살피고, 기업·연구자간 기술 비즈니스 협력강화를 위한 ‘바이오코리아2024’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차세대 신약 플랫폼,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당뇨·비만 치료제 등 10개 주제로 11개의 세션이 열린다.

9개국 약 60명의 국내·외 바이오헬스 산업계, 학계, 투자자 등 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여해 최신 이슈 및 기술 비즈니스 동향·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기업들의 개발 전략 등이 소개된다.

첫날 스마트 임상시험과 당뇨·비만 치료제를 주제로 혁신 기술의 현재와 미래

### 8일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스마트 임상 등 10개 주제 9개국 60여명 전문가 참여



를 조망한다. 스마트 임상시험 세션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임상시험 연구 사례를 공유한다.

둘째 날 스페셜 세션에선 차세대 플랫폼 개발 전략과 AI 의료서비스, AI 신약 개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이 진행된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항체약물접합체(ADC), 표적 단백질 분해(TPD),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다양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의 개발 현황과 미래 전망을 공개한다.

김용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담당장은 “BIO KOREA 2024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네트워크 교류와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 AI 신약개발 프로젝트 ‘K-멜로디’ 사업단 출범

### 348억 투입, 플랫폼 구축 등 지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빠른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의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MELLODDY) 사업단이 17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K-MELLODDY는 2024년부터 5년간 3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합학습 기반 ADMET(약물흡수·분포·대사·배설·독성) 예측 모델인 ‘FAM(Federated ADMET Model)’ 개발이 목표다.

프로젝트는 △플랫폼 구축 △데이터 공급·활용 △AI 모델 개발 등으로 구분된다. 이 프로젝트는 일회성 솔루션 구

축이 아닌 데이터 추가를 통해 연속적이고, 자동으로 성능이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단은 FAM 솔루션 확보 이후 연합학습 실용성 검증과 참여 기관 확대에 나선다. 또 신약개발 단계 적용 및 확장, 데이터 기여도 평가, 글로벌 협력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김화중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융합연구위원장을 사업단장으로 선임했다. 김 사업단장은 “연합학습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개별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약개발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신약개발 프로세스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 가지치기 나선 남양유업... 伊 레스토랑 문 닫는다

(일치프리애니)

남양유업이 2001년부터 운영해온 이탈리아 레스토랑 브랜드 '일치프리애니(IL Cipriani)'가 주요 백화점에서 잇달아 철수한다. 최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 끝에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충무로1가 신세계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 있는 일치프리애니 매장이 이달 30일을 기해 영업을 종료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6월 문을 연 이 매장은 3년 여간 운영해왔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끝내 문을 닫게 됐다.

앞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에 있던 일치프리애니 압구정점도 지

최대주주된 '사모펀드 한앤코' 수익성 낮은 사업 구조조정 돌입 현대·신세계百貨 잇따라 철수 남양유업도 순차적 종료 검토

난해 3월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문을 닫은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영업 중인 일치프리애니 매장은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4곳(무역센터점, 목동점, 천호점, 킨텍스점)을 포함해 7곳에 불과하다. 남양유업은 한앤코 인수 이후 외식사업 효율화 제고를 위해 매장 축소를 검토하고 있어, 남은 매장들도 추가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본지와외의 통화에서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외식소비 부진으로 외식사업 전



일치프리애니(IL CIPRIANI) 신세계백화점 본점 매장 모습. 사진제공 일치프리애니

반의 비용 절감과 효율화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기업 차원에서 일치프리애니 매장 운영을 순차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외식매장 축소 조치를 두고, 최대주주가 오너가에서 사모펀드사로 변경된 데 따른 후폭풍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업 매각 등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해 불필요한 몸집과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사모펀드 특성상 수익이 되지 않는 사업은 빠르게 정리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앞서 한앤코는 2013년 웅진식품을 1150억 원에 인수한 후 6년 뒤인 2019년 대만 통이그룹에 2600억 원에 매각, 식품 기업을 품었다가 엑시트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 한앤코는 당시 커피나 두유 같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일제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웅진식품의 회사 가치를 끌어올렸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수년 간 남양유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불매운동 등 악재가 겹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의 경우 △2020년 -770억 원 △2021년 -780억 원 △2022년 -868억 원, △2023년 -724억 원으로 2020년 이후 줄곧 적자다. 남양유업은 산하 외식브랜드로 일치프리애니 외에도 디저트 전문 브랜드 '백미당'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지도 대비 수익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한앤코는 2021년 이후 3년여 간 흥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주식 양도 소송을 거쳐 올해 초 최종 승소했다. 이후 지난 달 운영을 한앤코 회장과 배민규 부사장을 남양유업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등 이사진 변경과 내부개편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배민 기자 athena3507@



새 단장한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경주점. 홈플러스는 18일 경주점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26호점으로 새 단장 오픈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경기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 소재 점포 중 최초의 리뉴얼 점포다. '세상의 모든 맛'이라는 콘셉트에 따라 상품 및 공간을 최적화했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 한국맥도날드, 직영 매출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시장 진출 35년만에 성과 전년비 12.4%↑ 수익성 개선

한국맥도날드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 지 35년 만인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직영 매출은 사상 첫 1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출이 1조2920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하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직영 매출은 약 1조118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약 9946억 원 대비 12.4% 증가한 액수로, 1988년 한국 진출 이래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자 폭을 줄이며 수익성도 개선했다. 지난해 영업손실액은 2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줄었다. 한국맥도날드는 원·부자재 가격, 배달 수수료 등 지속적인 제반 비용의 상승 속에서도 고

객 중심 활동과 국내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집중하며 두 자리 수 매출 성장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국내산 식재료를 활용해 지역상생을 실천하는 '한국의 맛(Taste of Korea)' 프로젝트, 100% 재생페트컵 도입 등 친환경 요소 확대, 업계 최대 규모의 정규직 채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기능 도입과 디지털 편의 기능을 증대한 효과를 본 것이다.

2030년까지 500개의 매장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총 8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했고 고객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9개의 매장을 리뉴얼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의미 있는 ESG 투자를 단행하는 동시에 맛과 품질, 고객 경험 및 혜택 강화에 집중해 이례적인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로컬 소싱, 친환경 정책, 일자리 창출 등 한국 시장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고객 중심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j42@

## C커머스 초저가 폭격, K셀러로 막는다

G마켓·SSG닷컴 등 K이커머스 입점 판매자 혜택 확대 열 올려 "양질의 판매자 확보 경쟁력 UP"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C커머스(차이나 커머스)의 초저가 공습으로 인해 국내 이커머스업체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데 오픈마켓 업체들이 잇달아 셀러(판매자)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오픈마켓 사업의 핵심인 입점 판매자의 혜택을 늘려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기존 셀러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G마켓과 옥션은 내달 계획한 자체 대규모 쇼핑행사 '빅스마일데이'를 앞두고 국내 셀러모집에 팔을 걷어붙였다. 내달 7일부터 20일까지 빅스마일데이 참여 판매자에게 고효율 개인화 광고 상품인 '인공지능(AI) 매출업 광고'를 7일간 무료 지원한다. 또한 익일합포장 서비스로 배송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판매자에게 가입 월을 포함해 4개월간 물류보관비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입출고 시스템 및 포장, CS(고객 서비스) 처리 등의 풀필먼트(Fulfillment) 운영비도 50% 할인한다. G마켓은 이미 작년보다 오픈마켓 경쟁력 강화

국내 이커머스 판매자 강화 정책

|                         |  |
|-------------------------|--|
| <b>Gmarket AUCTION.</b> | 신규 판매자 광고 지원프로그램 무료 제공, 풀필먼트 운영비 50% 할인, 기존 가입자에 보관비 절반 지원 |
| <b>SSG.COM</b>          | 판매자 월 목표 매출 달성 축하금 산정 구간 100만원에서 100·300·500만원으로 세분화       |
| <b>11D</b>              | 판매자 물류비용 절감 위해 보관, 포장, 배송, 재고관리, 교환·반품 등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
| <b>LOTTE ON</b>         | 디지털전선 일부 카테고리 판매 수수료 기존 9 → 5% 인하                          |

\* 출처: 각사

를 위해 판매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왔다. 판매자 가입 및 판매 프로세스 개편, 물류입고대행 서비스 '스마일픽업'의 리뉴얼, 판매데이터 통계지표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서비스에 힘입어 작년 12월 기준 G마켓과 옥션이 누적 판매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다.

신세계그룹의 또 다른 이커머스업체 SSG닷컴은 배송경쟁력 강화, 판매자성장 프로그램 고도화를 올해 사업 전략으로 내세웠다. 일단 올 4분기 경기에 광주에 첨단 물류센터를 오픈, 배송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이를 가동하면 하루 20만 건 이상 주문을 추가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판매자를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 월목표 매출 달성 축하금 산정 구간을 기존 100만 원 단 일 구간에서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등으로 세분화했다. 11번가는 셀러의 물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체 풀필먼트 서비스 '슈팅 셀러'를 최근 론칭했다. 판매자가 11번가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하면, 보관·포장·배송·재고관리·교환·반품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 이커머스사업자가 판매자 유치에 일제히 공을 들이는 건 국내 시장에서 C커머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알리는 중국 현지 뿐만 아니라 한국 판매자 모집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사업 핵심은 양질의 판매자 확보"라며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좋은 상품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 셀러를 최대한 많이 모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 갤러리아百, 식품관 리뉴얼... 디저트 맛집 8개 유치

미 차백도·디 키사엔사보 등 입점 "고객에 새롭고 다양한 맛 선사"

한화갤러리아가 운영하는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명품관 고메이494 식품관의 새 단장을 마치고 총 8개의 신규 디저트 맛집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고메이494의 신규 디저트 브랜드 매장은 △에그서울 △위에 △꼬모운 △라뚜썬트 △베이코닉브런치바 △배러온 더라이스 △키사엔사보 △차백도 등 8 곳이다. 이 중 6곳은 백화점 최초 입점 브랜드다.

가장 이목을 끄는 매장은 중국 프리미엄 밀키트 전문점 '차백도'다. 중국에서 연간 10억 잔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프리미엄 밀키트 전문점으로, 1월 국내 상륙 후 백화점에서 첫선을 보인 다. 밀키트, 말리라떼, 프레시 프루트

티 등을 비롯해 갤러리아 단독 메뉴도 선보인다.

일본 레트로(복고) 카페를 의미하는 키사엔을 콘셉트로 하는 성수동 디저트 카페 브랜드 '키사엔사보'와 프랑스 최고급 밀가루 포리세로 만든 베이커리 '위에'도 백화점 업계 최초로 입점했다. '꼬모운'은 피낭시에, 마들렌 등 프리미엄 디저트 전문점 '꼬모운'은 셀린느, 로저비비에 등 명품 브랜드와 협업으로 유명하다. 망원동 맛집 '베이코닉브런치바'에선 수프, 샐러드 등 브런치 메뉴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무스비, 유부초밥 등 건강향 한끼 식사 브랜드 '배러온더라이스'와 제철 과일을 활용한 케이크&아이스크림 디저트 '라뚜썬트', K-디저트로 외국인 고객에게 인기인 '에그서울' 등도 만날 수 있다. 프리미엄 돈까스 전문점 '미하무'도 함께 선보인다. 문현호 기자 m2h@

# 간편결제 전성시대... 빅테크 vs 카드사 '불꽃' 튜다

## 수수료를 체계 정비 속도낼 듯

간편결제 시장 내 카드사와 빅테크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이들이 내건 간편결제 수수료율 체계 정비 공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생회복 공약으로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세운 간편결제의 합리적 수수료율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평가 및 적정수익에 근거한 적격비용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우대수수료율 적용도 약속했다.

간편결제 시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결제가 실물카드 결제 이용률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국내 지급결제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결제 가운데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비중은 50.5%로 실물카드 결제 비중(49.5%)보다 높은 수준이다.

간편결제 시장이 빅테크 위주로 성장하다 보니 카드업계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카드사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체계로 변경된 뒤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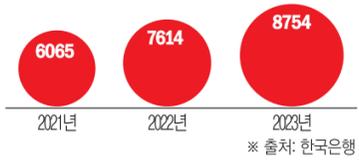
## 가맹점 수수료율 비교 (단위: %)

\* 신용카드 기반 결제 수수료율 기준

| 네이버페이 | 카카오페이 | 토스   | 신용카드 |
|-------|-------|------|------|
| 0.88  | 0.89  | 1.01 | 0.5  |

\* 영세(3억원 이하) \* 출처: 여신금융협회, 각사

## 하루평균 간편결제 이용금액 (단위: 억원)



## 모바일 등 결제, 실물카드 앞질러

빅테크 위주로 간편결제 시장 성장

##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0.93%

## 0.5% 적용 카드사는 엄격 규제 독자적 앱 구축 경쟁력 확보 계획

빅테크의 영세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네이버페이 0.88%, 카카오페이 0.89%,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1.01%로 집계됐다. 3사의 영세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율 평균은 0.93%로 신용카드사들이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보다 높은 상황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영세 가맹점에 0.5%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영세 가맹점을 기준으로 빅테크의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카드업계는 빅테크가 유사한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간편결제에 신용카드사와 동일한 기능과 동일한 규제원칙을 적용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간편결제사들은 카드사와 달리 수수료 규제가 없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카드사와 동일규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와 독자적인 애플리케이션(앱) 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모바일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신한SOL(솔)페이터치결제' 서비스를 비롯해 QR·NFC 등 결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KB페이'를 중심으로 결제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개선했다. 하나카드 역시 하나금융그룹 페이 플랫폼 '원큐페이'를 '하나페이'로 변경하며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카드사들은 본업 경쟁력이 약화될 정도로 수수료가 인하된 상황"이라며 "카드업계도 사용자 플랫폼을 강화하거나 오픈페이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간편결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jsw@



김주현(가운데)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에너지편드 조성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장> 김주현 "미래에너지편드 조성 재생에너지설비 증설 마중물"

### 산은·5대 시중은행 9조원 출자 2030년까지 기후기술편드 신설

"미래에너지편드가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에 필요한 금융수요 160조 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미래에너지편드 조성 협약식'에서 "우리나라는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기업들의 저탄소 공정 전환 지원에 42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편드 조성하고 기

후기술 선점을 위한 3조 원 규모의 기후기술편드 신설을 비롯한 총 9조 원의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미래에너지편드는 주로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는 편드,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이 2030년까지 총 9조 원을 출자한다.

금융위는 "총 9조 원의 모험자본을 바탕으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1.6%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래에너지편드는 상반기 중 조성을 완료해 올해 중 투자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에서 신규 조성 계획을 밝힌 기후기술 분야에 2030년까지 총 3조 원 규모로 투자하는 기후기술편드 조성 협약식도 이날 중 개최할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nova@

## 불법계좌 개설 따른 내부통제 부실 논란... 금융위 제재

# 대구銀 3개월 일부영업 정지·과태료 20억

###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못해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 안미칠 듯 이사회에 내부통제혁신위 신설

금융위원회가 불법계좌 개설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을 일으킨 대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 제재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17일 오후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동안 증권계좌 개설 영업정지 및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련 직원 177명을 대상으로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본 건

사고와 관련된 점과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 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는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본점 본부장 등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은행의 영업점 56곳의 직원 111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2년간 1547명의 고객 동의 없이 1657개 증권계좌를 무단 개설한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

구은행은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다수 개시하고, 이를 영업점 핵심성과 지표(KPI)와 개인 실적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임원별 책무 구조도 조기도입 추진·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중심으로 보는 데 대구은행의 대주인 DGB금융지주는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재은 기자 dove@

## 네이버페이, 핀테크·엔터 결합 신사업 추진

### 빌보드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네이버페이가 빌보드·빌보드 코리아와 함께 핀테크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네이버페이는 빌보드·빌보드 코리아와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1784에서 핀테크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시너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6월 예정된 빌보드코리아의 성공적인 한국 론칭을 지원하고, 음악·방송·공연



경기 성남시 네이버1784에서 박상진(왼쪽부터) 네이버페이 대표, 김유나 빌보드 코리아 대표 겸 빌행인, 마이크 반 빌보드 대표가 핀테크·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시너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네이버페이

등에 간편하고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범근 기자 nova@

## 푸본현대생명, 전직원 'ESG 실천 캠페인'

### 작년 한 해 종이 431만장 절약

푸본현대생명은 ESG경영 인식제고와 실천 다짐을 위해, 전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2024 ESG 나부터 실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푸본현대생명은 이 캠페인을 통해 △친환경데이 시행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페이퍼리스 활성화 △사회적 책임 의식 제고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친환경데이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시행되며, 월 1회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 직원들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날이다. 친환경데이에는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종이의 사용을 방지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싹 비우자는 뜻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문서와 오래된 이메일을 정리하고 있다.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은 쓰레기 분리배출 및 폐전지수거, 친환경인증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퇴근과 동시에 사무실 내 PC, 냉난방기 등 모든 전기제품의 전원을 정지에 끈다. 푸본현대생명은 페이퍼리스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 한 해 약 431만장의 종이를 절약했다. 김재은 기자 dove@

## 혁신·포용 앞세운 '토뱅크' 가입자 1000만 돌파

### 2년7개월간 혁신서비스 35개 이은미 "지속가능 혁신 이어갈 것"

토스뱅크가 혁신과 포용을 앞세워 1000만 명 고객을 달성했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출범 후 2년 7개월 만에 10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8초에 1명씩 토스뱅크

를 찾은 셈이다.

토스뱅크가 2년 7개월 동안 내놓은 혁신서비스는 35개에 달한다. 일상 속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입장에 공감하고, 금융주권에 대해 고민하며 다양한 시도와 서비스를 선보인 결과다.

2021년 10월 출범과 함께 선보인, 하루만 맡겨도 연 2% 이자(세전)가 쌓이



는 토스뱅크통장, 이듬해 내놓은 지금 이자 받기는 금융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은미(사진) 토스뱅크 대표는 "고객들의 신뢰를 지켜갈 수 있는 보안은 더 강화하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한층 높이며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연기금 '밸류업 역할론'에 쏠린 눈... 증시 구원투수 되나

## 밸류업 성공 위해 참여 필요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 세대·자녀 세대의 자산형성과 노후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은 체질 개선과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시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우리 경제에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17일 중견기업 간담회)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잇달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방식으로 기업의 체질개선과 변화, 프로그램 참여를 주문하고 있다. 기업들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기금 등 기관들의 안전판(적극적인 매수와 장기 보유)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연기금의 투자가 곧 정부의 의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연기금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석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략부장은 지난 3월 14일 기금운용본부 기자설명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찬성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부분이 밝혀지

당국, 기업 체질개선·참여 독려 시장, 연기금 적극적 참여 주문 1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후 연기금 9000억 순매수에도 外人 7000억 팔자에 ‘약세장’ “연기금 안 사는데 누가 사겠나”

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연기금은 코스피시장에서 30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사들였다.

시장참여자들은 연기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동성 측면에서 또 하나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 방정식이라 목소리를 낸다. 중동 분쟁과 미국의 ‘피벗’(통화 정책 전환)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휘청이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구원투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2024년 1월 24일~4월 17일) 연기금은 900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LG화학과 현대자동차, 신한지주, 포스코퓨처엠, 삼성SDI, 셀트리



코스피가 나흘 연속 약세를 보인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판에 코스피 증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45포인트(0.98%) 내린 2584.18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1.38% 하락한 7만8900원에 마감했다.

온, LG생활건강, 삼성생명, POSCO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순매수 ‘톱 10’ 이름을 올렸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꼽히는 저주గు자산배출(PBR) 종목들이다.

이전 3개월(10월 24일~1월 23일)만 해도 예코프로머티, 카카오, 포스코DX, 엘앤에프, 두산로보틱스, HMM, 삼성전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삼성 SDS 등 이차전지와 로봇주와 같은 성장 주들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러나 기업밸류업 수혜주를 사들이며 증시를 끌어올렸던 외국인의 빈자리는 컸다. 이날 코스피는 0.98% 하락한 2584.18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7만전자’(7만 8900원)로 주저앉았다. 중동 분쟁에 대한 우려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지거나,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했다. 외국인 은 이날 1800억 원 등 사들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7000억 원가량 순매도했다. 야당의 압승을 끝난 4·10 총선 후 ‘기업 밸

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이 약해진 데다 달러 가치가 치솟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기업밸류업 및 시장 버팀목 차원에서 연기금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올해 초 대규모 ‘팔자’ 행보로 한국 증시 발목을 붙잡았던 연기금도 ‘사자’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연기금의 참여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도 직결된다”고 했다. 외국계 증권사 A씨는 “연기금도 안 사는데 외국인들이 사겠나”면서 “장기투자 성격의 글로벌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연기금의 적극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본격 등판 시기만 남았다는 분석도 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고 나머지 3개 분야(세제 개편, 상법 개정, 기타 조치)는 모두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총선 결과로 추가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 주식 보유 장바구니를 더 채워야 하는 만큼 이들의 수급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

## 자본확충 나선 증권가... 후순위채 발행 20% 쏙

발행잔액 5.2兆 전년비 8600억 ↑ 한투궤 2배 최고... NCR 상승 수단

증권사들이 자본확충에 나서면서 후순위채 잔액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후순위채를 발행한 국내 증권사의 지난해 말 잔액은 5조1980억 원으로 전년 말(4조3398억 원) 대비 19.8% 증가했다. 금액으로 보면 8582억 원 늘었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9697억 원으로 106.4% 증가해 발행 규모와 증가율 측면에서 모두 1위였다.

현대차증권의 잔액은 2499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92.2%) 늘었다. 하나증권은 8596억 원으로 32.3%, 다음투자증권은 1200억 원으로 26.3% 늘어났다.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2022년에는 후순위채 발행 잔액이 없었지만 지난해 1198억 원 어치를 새로 찍었다.

증권사들이 후순위채 발행을 늘린 이유는 자본건전성 지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가 회사채를 찍을 때는 단기 자금을 장기자금으로 돌리거나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후순위채 발행은 자본확충해 순자본비율(NCR)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활용된다. 후순위채의 경우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100%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후순위채 발행 증가율이 높았던 증권사

는 지난해 NCR이 모두 상승했다. 새로 채권을 찍은 한화투자증권의 NCR은 2022년 말 487%에서 지난해 말 605%로 24.2%포인트(p) 뛰었다. 하나증권도 1269%로 20.7%p, 현대차증권도 520%로 15.3%p 급등했다. 다음투자증권은 301%에서 315%로 4.7%p, 한국투자증권은 2038%에서 2106%로 3.3%p 올랐다.

NCR은 증권사가 자금 조달과 운용에 있어 얼마나 재무건전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비슷하다.

특히 유상증자나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등 다른 자본 확충 수단이 더 어려운 것도 증권사들이 후순위채를 찾는 이유다. 김효숙 기자 ssook@

##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27.5兆 현금배당

69.8% 기업... 총 배당액 3.3% ↑

지난해 유가증권 상장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현금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배당금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법인 799사 가운데 69.8%(558사)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년(557사)과 유사한 수준이다.

총배당금은 27조5000억 원으로 전년(26조6000억 원) 대비 3.3% 증가했다. 평균 배당금은 492억 원으로 전년 477억 원 대비 늘었다.

지난해 전체 배당법인 중 93.4%(521사)가 2년 이상 연속배당했다. 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한 법인은 452사로 전년 대비 1.3% 늘었고, 지난해 전체 배당법인의

81%를 차지했다.

보통주 및 우선주 평균 시가배당률은 각각 2.72%, 3.43%로, 모두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보통주 및 우선주의 평균 시가배당률이 국고채 수익률을 하회했다. 지난해 국고채 수익률의 증가로 시가배당률이 국고채 수익률을 초과하는 법인수는 239사에서 168사로 줄었다.

현금배당 실시법인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10.2%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18.73%)에는 미달했다.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중에선 607개사가 2조5000억 원을 현금 배당해 전년 2조1800억 원에 비해 줄었으나 3년째 2조 원대를 유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중경제 1분기 깜짝 성장률... 중학개미 “가즈아~”

올 경제성장률 4% 중후반 기대 상하이종합지수 등 증시 반등에 차이나ETF상품 투자릿수 상승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기대치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학 개미(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에 투자한 주식 보관액은 9억 1224만 달러(약 1조2633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9억7278만 달러에서 올해 1월 8억3522만 달러로 줄어든 후 2월(9억2361만 달러)과 3월(9억2968

만 달러)에 이어 비슷한 규모를 유지 중인 모습이다.

올해 들어 나뭇잎을 키우던 국내 중국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들은 반등에 나서고 있다. 올해 2월 이후 국내 ETF 시장에서 TIGER 차이나전기차 레버리지ETF는 39.02% 오르며 상승률 4위에 이름을 올렸다.

TIGER 차이나CSI300레버리지ETF는 24.96%, KOSEF 차이나A50커넥트레버리지MSCI 역시 23.27% 상승했다.

이밖에도 TIGER 차이나전기차 SOLACTIVE(20.24%), KODEX 차이나2차전지MSCI(18.20%), KODEX 차이나레버리지(18.06%)도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 등 중국 증시가 반

등세를 보인 영향이다.

백진규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중국의 내수 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등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분기 성장을 견인했다”며 “중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비롯한 경기부양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올해 경제 성장률도 4% 중후반의 중속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중국의 경기회복방향성을 점치면서도 추가적인 지표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주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양호한 제조업 및 수출 흐름이 중국 경기 회복의 방향성을 지지한다”며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부양 정책 효과와 실질금리 하락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 미래에셋 ‘글로벌X’ 라이언 오코너號 출범

17년 이상 경력 ETF 전문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7일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운용회사 ‘글로벌엑스(X)’가 라이언 오코너(사진) 신임 대표이사 체제로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8년 미국 ETF 전문 운용사 글로벌엑스를 인수했다.

라이언 오코너는 골드만삭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등 미국 ETF 시장에서 17년 이상 근무해 온 ETF 전문가다.

2008년 3월 설립된 글로벌엑스는 그동안 다양한 혁신 상품들을 선보이며 미국 시장에서 혁신적 ETF의 선두주자로 성장했다. 11일 기준 총 운용자산(AUM)은 65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말(56조 원)보다 약 8조9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라이언 오코너 체제가 출범하며 글로벌엑스는 미국 ETF 시장 진출 15년 만에 ‘혁신적 ETF의 선두주자’에서 ‘글로벌 Top Tier ETF Provider’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무 책임자인 에릭 올슨(Eric Olsen) 등도 새롭게 합류했다.

글로벌엑스는 전 세계 ETF 시장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며 브랜드 가치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글로벌엑스 캐나다 리브랜딩 예정인 캐나다 ETF 운용사 Horizons ETFs와의 다양한 협업도 준비 중이다.

라이언 오코너 CEO는 “혁신적인 신상품, 투자솔루션, 인사이트 등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IBK기업은행

글로벌 금융전문지 선정  
대한민국 중소기업금융 최우수 은행 賞 3관왕 수상

ASIAMONEY  
Best Bank For SMEs South Korea  
아시아머니 선정, 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Global Finance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The Asian Banker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아시아뱅크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 세계, IBK기업은행에 집중하다

변화를 이끄는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서울시,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  
“투기거래 차단 위해 불가피”

2021년부터 4년째 거래 규제

주민 “뒀 시장에 기대 높았는데”  
총선 당선자들도 “해제” 목소리

전문가들은 재지정 필요성 인정  
“해제 땀 집값 급등 도화선 될 수”

서울시가 강남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

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일대는 2021년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됐다.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제 요구가 지속됐다. 제도의 실효성이 불분명하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다.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해 4·10 총선에 나온 강남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서명옥 당선자와 양천구갑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를 높였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해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 등에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지역 내에서 같아

타기를 하려고 해도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서 끔찍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정도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상황”이라며 “시가 개인의 권리를 3년 넘게 묶어두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당선될 때만 해도 지역 내에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이제는 비호감이 더 커

졌다”며 “분노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제했다면 투기 수요가 들어오면서 집값 급등의 도화선이 됐을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가 오름세를 반드시 막는다고 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억제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을 낮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수요자만 진입하게 하는 역할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의 완만한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정책연구소 대표는 “목동은 재건축 이슈로 몇 달 전부터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잡실 리전츠도 거래가 계속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해당 지역들은 실수요가 많은 곳이라 토지거래허가제가 유지되더라도 수요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보규 기자 jbk@·허지은 기자 hje@

## GS건설 ‘자이’ 경기 여주에 첫선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  
총 769가구 내달 분양  
“판교까지 40분대 이동”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Xi)가 경기도 여주지역에 첫선을 보인다.

17일 GS건설은 다음달 경기도 여주시 교동 500-118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여주역자이헤리티지’〈사진조감도〉 769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8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 물량 중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이 663가구로 86%를 차지한다. 고급을 추구하는 수요층을 위한 펜트하우스도 2가구 있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도보권에 있는 경강선 여주역을 통해 판교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여주역은 정부의 2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하나인 GTX-D 노선에 포함될 곳이기도 하다. GTX-D 노선은 경기도 김포와 하남, 원주를 잇는다.

아울러 동서광역철도망인 경강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경강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여주는 서쪽으로 판교와 인천, 동쪽으로 원주와 강릉까지 연결된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서여주 IC, 영동고속도로 여주 IC, 제2영동고속도로도 가깝다.

단지는 약 5만9000㎡ 규모로 조성 중인 세종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들어선다. 이곳은 현재 입주를 마친 여주역세권과 교동·교동 2지구에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를 더하면 총 3872가구로 여주 최대 주거단지가 된다. 흥문 1·2지구, 교동 1지구까지 포함하면 6000가구에 달하는 미니신도시가 만들어진다. 3900여 가구가 들어설 2차 도시개발사업도 계획돼 있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교육여건이 좋다. 세종초와 세종중이 도보권이고 110년 역사의 여주초가 2025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여주역세권지구로 이전을 준비 중이다. 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해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학교시설복합화사업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마트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가깝고 여주버스터미널, 하이마트, 여주경찰서 등은 단지 반경 3km 이내다.

단지 주변으로는 황학산 산림욕장, 황학산 수목원, 영월공원, 신록사 관광지, 금모래 강변공원, 세종대왕릉 등이 밀집해 있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남향 위주로 배치되고 4베이 이상 판상형 평면구조로 공간감과 일조량을 극대화한다. 일부 가구는 3면 발코니가 적용되고 대형 드레스룸도 제공한다. 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실내 골프연습장과 사우나, 작은 도서관, 카페앤라운지 등이 조성된다.

전보규 기자 jbk@·사진제공 GS건설

## 청약통장 가입자 두 달 연속 증가...분양시장 온기 돌까

치솟는 공사비에 분양가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감소하던 청약통장 가입자가 전달 20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뒤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청약 열기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자녀, 신생아 특별공급 등 청약제도 개편과 매매 시장 회복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지만,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것 어려워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56만8620명으로 전월 대비(2556만3099명) 5521명 늘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앞서 2월 말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청약에 뛰어드는 수요자도 늘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에 전국 1·2순위 아파트 청약 신청자는 19만8458명으로 지난해 동기(8만2558명) 대비 140.4%(11만

1분기 청약자 작년보다 140% ↑  
매매 회복 이어 분양도 훈풍 기대  
다자녀·신생아 특공 확대도 한몫  
대세 흐름 바꿀지엔 의견 엇갈려

5900명)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두고 매매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분양시장까지 훈풍이 분 것이라 분석을 내놨다. 수년간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기존 분양권을 매입하거나 구축을 매수하는 등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음에도 분양이 가진 분명한 메리트에 수요가 몰렸다는 해석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분양은 분납 형태를 취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 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내야 하는데, 분양은 2년6개월 간 계약금, 중도금 형태로 나눠서 지불한다. 이때문에 초기자금이 부족해도 진입이 가능해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것”이라고 분

석했다. 이에 더해 ‘결혼 패널리’로 여겨졌던 기존 주택청약 제도가 크게 개선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달부터 최대 1억2000만 원이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1억6000만 원 선까지 대폭 완화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인정돼 높은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복청약도 가능해졌다. 다자녀 기준 하향과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도 새롭게 시행됐다.

함 랩장은 “청약제도가 손질되면서 출산 가정과 결혼 가정에게 청약 문호가 확대됐다”고 봤다.

다만 이같은 훈풍이 대세 흐름을 바꿀 정도로 강하게 이어지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변수는 금리”라며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언제 인하할지 전망이 쉽지 않아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진리 기자 truth@

## 롯데건설, 부산창조경제센터 손잡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모집

롯데건설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부산센터)와 함께 ‘B.Startup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2024’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5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B.Startup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2024는 우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해 대기업과의 협업, 시장 검증 기회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 제휴 가능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2년 ‘프라이빗 미팅행사(Private Meet-Up Day)’를 시작으로 부산센터와 함께 유망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을 발

굴하는 세 번째 공동 행사다.

모집분야는 △AI 기반 설계도서, 문서 데이터 분석/처리 기술 △고객 대응 및 사내업무용 솔루션 △그 외 안전, 품질관리, 업무효율성 향상, 건설 협업 Tool 등 건설산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 관련 자유주제다. 롯데건설에 제안할 기술 및 서비스를 가진 전국 소재의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롯데건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현장 내 PoC(Proof of Concept, 사업 실증) 기회와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이 제공되며, 향후 오픈이노베이션 행사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한진리 기자 truth@

## 부동산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최고등급’ 우수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이래 3년 연속 달성한 성과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으로 매년 하는 조사로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부동산원은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선불리 개강했다간 출석 미달”... 일부 의대, 수업 또 연기

건양대·성균관대 등 1~2주 늦춰 출석을 저조... ‘집단 유급’ 우려 의대생 유효휴학 신청 56% 넘어 정부 “5월 수시공고 늦출수 없어” 의대생들, 대학 총장 소송 준비

집단 유급까지 노선이다가 오면서 의과 대학들이 개강에 들어간 가운데 출석을 저조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학사 일정을 다시 미루는 학교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번 주 수업 재개를 계획했던 건양대·성균관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등이 수업 시작 시점을 1

주 또는 2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들 대학은 교육부에 이번 주부터 수업 재개를 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들 대학은 의대 증원 관련 갈등 상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선불리 개강했다가 학생들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등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수업을 재개해도 학생들이 수업에 빠지면 집단 유급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교육지책’이라는 설명이다. 대학들은 줄어든 수업일수를 메꾸기 위해 주말수업이나 방학을 줄이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개강 일정을 미룬 대학들이 계속해서 수업을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

분 의대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이다.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또 국가고시 응시 기준인 ‘임상실습 기간 총 52주·주당 36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수업을 더 늦추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의사 국가고시를 칠 수 없다.

이에 의대들은 학생들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의대에선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만 해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날 교육부가 전국 40개의 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교, 13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건수는 1만578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의

56.3%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휴학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에 대한 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교육부는 5월 말로 공표된 수시모집 요강 등 시행계획 일정을 추가 연기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9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일정을 고려할 때, 5월 말로 예정된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련 내용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인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 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현경 기자 son89@



장애인의 날... 동행서울 누리축제 오세훈(왼쪽 세 번째) 서울 시장이 1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설치된 누구나 벤치에서 관수진(17·맨 오른쪽)양 등 관계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는 기술, 교육·문화, 일자리, 인식 개선 4개 테마로 진행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 檢 “이화영 술판 진술, 명백한 허위”

“음주 불가능·진술 조작 없어 재판에 영향... 법적 조치 검토”

검찰이 쌍방울대북송금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 대해 장문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

수원지검은 17일 “이화영 측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점 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화영은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후 6월 9일부터 6

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 이재명 전 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7월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CTV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된다”며 “보존기간은 30일”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측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해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은 이달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처음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이현 기자 spes@

## ‘6월 항쟁’ 박종철 열사 모 정차순 씨 별세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의 고문으로 숨져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씨가 17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박종철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빈소는 서울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9일 오전 8시, 장지는 서울 시립송화원 후 모란공원이었다.

고인의 남편인 박정기 씨는 2018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박 씨는 아들의 죽음 이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를 이끄는 등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했다.

고인의 2남 1녀 중 차남인 박 열사는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려던 경찰에 강제연행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본실에서 고문받다가 다음날 사망했다. 당시 경



17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서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인 정차순 여사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고, 이 사건은 6·10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2009년 6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박 열사 사건에 대해 국가와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권고했고, 이듬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과했다.   
장유진 기자 yxj@

## 지식산업센터 탈 쓴 공장들... 민사소송 줄이어



부동산 소액 투자자를 끌어들이던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장에 사고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 필요한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데 하필 부동산 규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탓에 그간 쌓였던 문제가 터진 것이다.

17일 법조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건설과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며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일부 추가됐지만 기존의 ‘공장’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수정 법무법인 LKB & Patners 변호사는 “명칭이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면서 약취, 소음 등 문제만 없으면 업종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전매나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돼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그 실상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입주가 시작되면 수분양자들은 ‘대출이자’ 압박을 받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에서 중도금은 집단대출상품으로 해결하는데 그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한다. 그러나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면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의 몫이 된다.

‘언제든 전매’ 새 투자처 각광 필요 수요 초과하는 물량 공급 분양자 기만하는 계약 다반사 공실 속출... ‘마피’ 매물 다수

“등기를 치기 전에 무조건 팔아 전매 차익을 보장하겠다”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모른 채한다. 고금리에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공실은 속출하고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는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가 속출하고 있다.

공실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 계약자들은 임대도 전매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고, 결국 높은 대출이자에서 벗어

나려 계약을 파기하는 민사소송이 최근 줄을 잇는다고 한다.

사업주체들 간에 분양 유지 경쟁도 한껏 과열됐다. 입주 전 ‘사전의향서’ 형식으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기 십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자금 확보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사업주체와 분양대행사가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설립자가 만든 분양업무 기준을 무시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청약하려는 호실이나 타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착순으로 입금하는 이른바 ‘초치기 방식’이 동원되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대출비율이나 전매차익, 임대수익을 속여 분양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행세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 농진청, 폰으로 기상재해 사전 알림... '금사과 주범' 잡는다

## 농가 조기경보 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우리 농장 주변 입력하면 반경 30m 단위로 기온과 강수량, 습도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재해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미리 알림도 받아요.”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 기상재해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했다. 지난해에는 사과와 배가 냉해 피해 직격탄을 맞았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과수 생산 주요 지역에서 서리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서리는 봄철에 발생할 경우 농작물 조직에 동상을 입혀 파괴한다. 지난해 개화기에 냉해로 인해 사과 착과 수량은 전년 대비 16.5%, 배는 31.8% 각각 감소했다.

농촌진흥청은 이같은 이상기온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위험관리 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기온·강수량·일조시간·습도 등 반경 30m 단위 상세 기상 예측 40종 작물 생육단계별 예보 가능 내년 155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

## 조기경보 홈페이지·앱 통해 간편 신청

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의 핵심은 농장 단위의 상세 기상 정보와 함께 작물재해를 예측하는 것이다.

기상청의 동네예보는 읍·면 단위 5km 반경을 보여주지만 농진청의 조기경보는 30m 반경, 여기에 지형과 고도까지 반영해 농장 단위로 예측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주변을 입력하면 기온과 강수량, 일조시간, 풍속, 일사량, 습도 등 11종의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루이틀 전 실황은 물론 현재 기상을 알려주는 단기예보, 9일 이후까지인 중기예보도 알 수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고도 차이에 의한 기온 편차, 산 중턱의 온난대, 저지대의 냉기 상황, 경사에 따른 일사 반응효과 등을



조기경보서비스 알림톡. 사진제공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기상관측장비. 사진제공 농촌진흥청

모두 반영했다”며 “고도와 지형에 따라 옆 동네라도 차이가 나는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개별 농장 규모로 기상을 추정하는 소 기후 예측 모형을 개발했다”고 기술을 설명했다. 여기에 작물의 정보와 연계해 농장 기상과 작물 생육상태를 반영한 재해위험 정보도 판정해 알려준다. 재배 중인 과수와 채소, 식량 등의 품종별로 기상 재해는 물론 병해충 예보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과와 배, 단감, 벼 등 총 40종의 작물에 대한 생육단계별 기상 재해 예보가 가능하다. 하루이틀간의 급격한 기상 조건 변화로 발생하는 고온해와 저온해 등 급발성 재해와 함께 가뭄해, 냉해 등 장기간에 걸친 기상 조건 누적으로 생기는 지발성 재해도 추정해 위험도를 알려준다. 이 같은 기술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농진청은 2017년 알람 핵심 기술을 개발해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시·군(14개)을 대상으로 실증연구후 서비스제공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 75개 시·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 정보 알림'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올해 말

까지 서비스대상을 110개 시·군으로, 내년에는 155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재해 예보 대상 작물도 2027년에는 50종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 정보를 받고 싶은 농업인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필지주소, 재배작목, 인적사항 등을 적어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거주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진청 기후변화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구복 농진청 기후변화평가과장은 “최근 증가하는 봄철 이상기온으로 발생하는 과수 작물의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알람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 대상 지역의 농업인은 알람 서비스를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진청이 1년 이상 알람서비스를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5%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고, 특히 ‘작물 재해예방에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한 농가는 85.7%로 나타나 서비스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사과와 배 수확량을 결정짓는 꽃 피는 시기가 되면서 냉해와 질병 발생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위험 알림 함께 저온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과수만 개 시기 예측 결과에 따르면 배 주산지인 울산, 전남 나주, 경북 상주는 4월 둘째 주 기준 대부분 꽃이 활짝 핀 것으로 나타났다. 배보다 다소 늦게 꽃이 피는 사과는 경남 거창, 대구 군위, 충북 충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4월 셋째 주 무렵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꽃이 피면서 농가는 과수화상병 등 질병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과수화상병 예

## “과수화상병 약제, 꽃 절반 피었을 때 5~7일 간격 뿌리세요”

측 서비스나 농진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발송하는 알림 문자를 참고해 꽃 감염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는 날씨 자료를 기반으로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이 큰 시기를 예측해 알맞은 약제 살포 시기를 안내한다.

온라인 정보 검색이 어렵거나 알림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농가에는 과수원 꽃이 절반 정도 피었을 때부터 5~7일 간격으로 약제 살포를 권장하고 있다.

## 봄철 대기 불안정에 냉해피해 급증 생육점검·사례공유 등 관리 강화



조재호(오른쪽) 농촌진흥청장이 경북 문경시 사과 재배 농가를 방문해 과수화상병 개화기 방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진청 관계자는 “꽃 감염 위험도가 위험 혹은 매우 위험 단계라는 경고가 표시되면 24시간 안에 약제를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 정확도를 높이고 예방 효과가 우수한 약제 선별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냉해 피해도 예방이 필요하다. 이달 들어 아직 사과와 배의 저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봄철 대기 불안정으로 우박이 쏟아지거나 기온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 과수 재배 농가의 철저

히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농진청은 이달 말까지를 과수, 시설채소, 노지작물 저온 피해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9개 도 농업기술원, 159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매주 생육 점검과 현장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등 상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철희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에 가입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기상 정보를 제공해 적극 대응토록 조치하고 있다”며 “과수농가에서는 지역별 기상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관리 요령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굿네이버스로 Good Neighbors-ro

굿네이버스

평범한 일상에서도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기로  
 그렇게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로  
 오늘도 우리는,  
**굿네이버스로  
 향합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해외 갈 때 아직도 현금 환전해?”



환전 수수료 없고

현금 들고다니기 불안한데

왜안 SOL?

써보면 왜 쓰는지 아는

SOL 트래블 체크카드

[유의사항] - 이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대상 금융기관이며, 신한카드는 부보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별도의 법적 계약이 없는 한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는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로는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부탁 드립니다. - 전월실적 및 혜택 상세기준 등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참조 - 혜택 1. 환전 100% 우대, 재환전 50% 우대 2. 국내 편의점 5% 및 후불교통 1% 할인, 국별 특별 가맹점 5% 할인(일본, 베트남, 미국) 3. 외화계좌 특별금리(연 USD 2.0%, 유로 1.5%)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4-11050-1호(2024.03.12~2025.03.11) \*신한카드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40312-Dpr-001호(2024.03.12~2025.03.11)

# “욕망 저어하지 말라고... 이번엔 받아야겠다 생각”

## 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작가

후보작 오른 ‘철도원 삼대’  
유년시절 보낸 영등포 배경  
“오랜만에 즐겁게 쓴 소설”  
5년 전에도 1차 후보 올라  
“근대인물 주제 2~3권 더  
85세까지만 소설 쓸 계획”

“십여 차례 국제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옛날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상하다. 누가 나에게 욕망을 저어하지 말라고 하더라. 욕망을 자기화하라는 것이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듯해서 이번엔 내가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꿨다.”

17일 서울마포구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철도원 삼대’ 부커상 최종후보 선정 기자간담회에서 황석영 작가는 “만약 부커상을 받으면 그다음에는 책을 몇 권 더 써서 다음상을 받아야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철도원 삼대’는 구상부터 집필까지 30년이 걸렸다. 철도원 가족을 둘러싼 이야기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



황석영 작가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장편소설 ‘철도원 삼대’ 기자간담회에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지 한반도의 역사를 조명한다.

부커상 심사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철도원 삼대’ (영문판 Mater 2-10, 번역 김소라·배영재)를 2024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숏리스트) 6편 중 하나로 발표했다. 지난 3월에 공개된 1차 후보 13편을 대상으로 한 이번 발표에서 아시아권에서 최종후보에 오른 작품으로는 ‘철도원 삼대’가 유일하다. 황 작가는 2019년 ‘해질 무렵’으로 같은 부문 1차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심사위원회는 “이 작품은 현대 산업노동자들의 삶을 반영하는 미술적 리얼리즘 소설이며, 황석영이 30년을 바친 최고의 걸작”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황 작가는 “소설의 배경인 영등포는 내가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다. 오랜만에 쓰면서 즐거웠던 소설이다. 근데 평론가들은 내가 괴롭고 힘들게 쓴 작품을 좋아하더라”라며 “78세 때 이 소설을 썼는데, 매주 50매를 마감했다. 그걸 1

년반 동안 했으니 엄청난 분량이다. 그럼에도 신나게 썼다”라고 밝혔다.

‘철도원 삼대’ 번역은 김소라·배영재 씨가 맡았다. 황 작가는 “번역에 관해선 절대로 참견하지 않는다. 다만번역가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내가 주석 달듯이 며칠 동안 작업해서 보내준다. 그 뒤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올해로 82살이 된 황 작가는 여전히 창작욕이 왕성하다. 이날 그는 기자들에게 앞으로 흥분도, 최시형 등 근대인물들을 주제로 2~3권의 책을 더 쓰고 싶다고 밝히며 “85세까지만 소설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82살이 된가. 뒷간에잠시 갔다 왔더니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다. 정역을 갔다 오니 10년을 허송으로 보냈다. 그건 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웃었다. 이어 “여기 있는 기자분들이 앞으로 5년은 더 문학담당을 한다면, 내가 죽는 모습도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커상 최종 수상작은 내달 21일 런던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수상 작가와 번역가에게 모두 5만 파운드(약 8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송석주 기자 ssp@

## DB생명 창립 35주년 기념식 김영만 사장 “내실 성장 가속화”

김영만(사진) DB생명 사장이 “더 큰 도약을 위해 수익성 중심의 내실 있는 성장을 가속화하고 견실한 조직 성장, 변화 대응력을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17일 DB생명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12일 본점 DB금융센터에서 진행된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수년간 보장성 보험의 판매를 확대해 수익성 있는 경영구조를 만들어왔다”면서 “이러한 기반하에 신제품이 시행돼 손익 및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며 고객과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DB생명은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이달 30일까지 ‘달려라! 백년친구’라는 주제로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DB생명의 캐릭터인 우리와 우리를 움직여 제한 시간 내에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과 인스타그램 인증샷 업로드 두 가지의 이벤트로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과 참여는 DB생명 홈페이지나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은 기자 dove@

## 커넥트웨이브, 손경성·홍성배 CTO



커넥트웨이브가 신규 최고기술관리자(CTO) 선임에 통해 플랫폼 고도화 및 시너지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커넥트웨이브는 인공지능(AI) 태스크포스(TF)팀의 손경성(왼쪽 사진) 상무와 에누리닷컴 개발부문장인 홍성배 상무를 각각 컨슈머 커머스 CTO와 셀러 커머스 CTO로 선임한다고 17일 밝혔다.

손 선임 CTO는 네이버 쇼핑 AI 개발 리더, 네이버 쇼핑 검색 개발 리더, 네이버 부동산 및 비즈 OCR 개발 리더, 네이버 인공지능 영역 기술 성장 위원 등 네이버 쇼핑과 인공지능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다나와와 에누리의 통합 검색엔진 구축, IDC 통합 추진을 통한 가격비교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는 등 다나와와 에누리의 본격적인 시너지 창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홍 선임 CTO는 이베이와 에누리 경험을 가진 이커머스 전문 개발자로 서에누리의 검색엔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자사몰(소비자 직접 거래) 제작 플랫폼인 메이크샵 검색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한 바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

## 신한금융,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 40억 기탁

### 행정안전부·경찰청과 업무협약

신한금융희망재단은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 경찰서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과 함께 각종 지원 연계 및 안전 조치 관리 등 실질적 보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한금융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의 보호 및 지원

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을 통해 보호 지원 대상 범죄 피해자 취약계층 발굴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들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총 40억 원의 지원금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생활, 의료, 주거 비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성과 보고회 및 시상식 개최 등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윤희근(왼쪽 세번째부터)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진옥동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등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난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사회복지관 211개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취약

계층 170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비용 등 총 24억 원을 지원하고, 우수 사회복지사를 선정해 표창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하이트진로 ‘장애인의 날’ 맞아 시각장애인복지관 후원금 전달



하이트진로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7년째 하고 있는 장애인 대상 지원 활동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 소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정세영(사진 왼쪽) 하이트진로 상무, 백남식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 11개 지역 16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지원한다. 시각장애인과 24시간 밀착 생활해야 하는 가족을 위해 각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개별 진행 중인 ‘가족지원 프로그램’도 후원한다.

김유연 기자 kyy0907@·사진제공 하이트진로

## 흥국화재 ‘2023 연도대상’... 보험왕에 이미선 팀장

흥국화재는 아난티 옛 부산 코브에서 ‘2023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한해 동안 영업현장을 누비며 고객과 직접 소통한 전속 보험설계사(FC)들의 성과를 치하하는 자리로, 송운상(사진 왼쪽)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국 설계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업실적이 가장 뛰어난 보험왕에게 수

여하는 본상 대상은 울산지점 이미선(가운데) 영업팀장에게 돌아갔다. 지난 1년간 신규계약마진(CSM) 4억1000만 원과 장기신규계약 2800만 원 달성 등 다방면에 걸쳐 탁월한 성과를 냈다. 이 팀장은 2021년에도 본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총 59명의 설계사가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신인 대상은 수원TFC지점 고



미순 설계사가 수상했으며, 리크루팅 대상은 강서TFC지점 김미선 팀장이 수상했다. 김재은 기자 dove@·사진제공 흥국화재

## 부음

- ▲조향자 씨 별세, 이광규 씨 부인상, 이진구(서울시 교통정책과장)·지원·지영 씨 모친상, 김소연 씨 시모상, 루벤로 메로 씨 장모상 = 16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8일 오후 2시 20분, 02-2262-4800
- ▲박봉애 씨 별세, 김중곤·미자·순덕·삼덕·미숙·은숙·훈곤 씨 모친상, 이재영(이투데이 금융부차장) 씨 외조모상=17일, 여수제일병원장례식장 VIP2실, 발인 19일 오전 8시, 061-692-4444

- ▲장병익 씨 별세, 장민호·경호·진호(한국수출입은행 홍보실 수석홍보역)·미란 씨 부친상, 박유민·임은하 씨 시부상, 17일 광주시 금호장례식장 특301호, 발인 19일 오전 7시 30분, 062-227-4000
- ▲서상룡(서강대 명예교수) 씨 별세, 서병일(에스에이티 본부장)·병찬(전 우리아메리카은행 이사)·병욱(유라 글로벌사업본부 이사) 씨 부친상 = 16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 30분, 031-787-1505
- ▲남윤삼(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씨 별세, 현희(송실대 독어독문과 교수) 씨

- 남편상, 남연식(교촌F&B 법무팀 책임·독일 변호사) 씨 부친상 = 16일,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9일 오전 5시 30분, 031-961-9401
- ▲이순우 씨 별세, 이상호(태백시장)·상엽 씨 부친상, 허유저 씨 시부상 = 17일, 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033-581-4444
- ▲이수인(권사) 씨 별세, 김학중(안산 꿈의교회 담임 목사·전 CBS 이사장) 씨 장인상 = 1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 발인 19일 오전 6시 20분, 02-2227-7500

## 인사

- ◆연세대학교의료원 ◇의료원(행정부서) △사무처 사무부처장/사무처 사무국장 겸직 이학선 △인재경영실 인사국장 권영식 △기획조정실 기획국장 황상철 △송도세브란스병원권립추진본부 사무국장/중장기사업본부 국내사업팀장 겸직 이인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김성수 △간호1국장 신혜경 △간호2국장 조미화 ◇강남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주수용 ◇용인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천병현
- ◆동화약품 △공장장 박진

마감 후

200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있었던 일이다. 고(故) 이근희 삼성 선대회장은 세계 최고의 디자인 관련 박람회 중 하나인 밀라노가 구박람회를 본 후 “삼성의 디자인 경쟁력은 아직 1.5류다.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은 평균 0.6초인데 이 짧은 순간을 잡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다음 날 밀라노 현지로 주요 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 ‘제2디자인 혁명’을 선포했다. 1996년 ‘디자인 혁명의 해’를 선언한 지 9년이 지났을 때였다. “물건만 잘 만들면 되지”라는 뿌리 깊은 전통 제조업 사고가 쉽게 바뀌지 않자 다시 한번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선 것이다. 이듬해 삼성은 와인잔 형상의 보르도 TV를 출시해 연간 300만 대 판매했고, 소니를 제치고 TV 판매량



송영록  
산업부 차장

대차그룹에 합류한 슈라이어 사장은 현대차와 제네시스, 기아의 디자인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대표적인 ‘호랑이 코’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은 기아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기업들의 디자인 경영은 현재 진행형이다. 삼성전자는 16일부터 21일까지(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밀라노 디자인위크 2024’에 참가해 ‘공존의 미래’ 전시를 공개하고 2030년까지 삼성전자가 추구할 디자인 지향점을 발표했다.

LG전자도 이번 디자인 위크에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부터 매스프리미엄 제품군까지 포함하는 다채로운 빌트인 라인업을 공개했다.

기아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단독 전시를 통해 디자인 철학인 ‘오픈잇 유나

일단 눈에 띄어야 팔린다

세계 1위에 올랐다.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2006년 3월 말 연구개발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디자인과 기술력이 쌍두마차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공식적인 ‘디자인 경영 선포식’을 열고, 디자인 중심의 제품 개발을 의미하는 ‘디자인 퍼스트(Design First)’란 슬로건을 채택했다. 기술에 맞춰진 디자인에서 벗어나 개발 초기부터 디자인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상품기획과 설계,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을 일컫는다.

2005년 기아자동차 최고경영자가 된 정희선 회장은 그룹내 두 개의 브랜드 운영방식을 고민했다. 기아가 현대차그룹에 합류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뚜렷한 이미지를 갖추지 못한 탓이다. 이때 정 회장이 꺼낸 카드가 ‘디자인’이다.

기아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감각적인 디자인을 판매 포인트로 잡고,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인 피터 슈라이어 사장을 2006년 영입했다. 현

이티드(Opposites United-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를 알리고 있다. 특히 전시장 2층에 준비된 무대에서는 기아글로벌디자인담당 카림 하비브 부사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가 매일 저녁 포럼을 통해 세계 각국의 고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해 돈을 벌고, 번 돈으로 투자에 나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해 낸다. 이 과정에서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한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지갑을 쉽게 열지 않는다.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것도 한계다. 소비자가 바로 체험할 정도의 기술발전은 쉽지 않다.

20여 년 전에는 혁명이었지만, 이제는 다소 식상한 표현인 ‘디자인 경영’이 최근 다시 부각되는 것도 이때문인 듯싶다. 가격, 디자인, 품질 등 뭐 하나 놓쳐서는 안 되지만 첫인상만큼 중요한 건 없다. 새로운 디자인 혁명이 시작돼야 할 시점이 왔다. syr@



안병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국경없는 단일시장... 검은돈 ‘활개’ ‘차단·응징’ 돈세탁 방지 대오 갖춰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유로폴 본부. 유로폴은 지난 5일 유럽연합 내에 조직원 2만5000명을 거느린 821개의 갱단이 활동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AP연합뉴스

2018년 2월 초 미국 재무부는 라트비아의 3대 시중은행 ABLV가 돈세탁에 연루됐다고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이 은행이 러시아와 연계해 유령 회사를 통해 수년간 21억 유로, 약 3조450억 원의 돈세탁을 자행해왔다고 밝혔다. ABLV는 그해 6월에 청산됐고 은행장을 비롯해 유령회사의 임원도 기소됐다.

유럽에서 돈세탁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아니다. 그해 11월 덴마크 최대 민간은행 단스케(Danske)은행의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지점도 같은 혐의에 연루됐다. 이 은행은 2007년부터 8년간 러시아와 라트비아, 키프로스, 영국 등 비거주자의 달러예금을 받아 일부를 유령회사를 이용해 세탁 후 수백 개 계좌에 송금했음이 밝혀졌다. 이런 대형 금융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뒤늦게나마 유럽연합(EU)이 돈세탁 방지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한해 돈세탁 그리스 GDP 웃돌아

지난 2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내년부터 업무를 개시할 EU 돈세탁방지청 소재지 투표를 실시했다. 1차 투표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시가 과반을 얻어 마드리드, 파리를 제치고 이 기구를 유지했다. 단일화폐 유로존의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ECB)이 여기에 있어 금융 인프라가 발달했다는 점이 신설청의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EU 27개 회원국 간에는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본과 사람도 자유롭게 이동한다. 라트비아 ABLV 사건에서도 한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여러 회원국 거주자의 예금을 받아 처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국경 없는 단일시장 EU이기에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돈세탁을 감시할 기구가 필요하다. ECB 내에 금융기관의 감독과 해산을 담당하는 단일 감독청이 있지만 돈세탁까지 맡을 여력이 없었다.

돈세탁방지청은 EU 회원국 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돈세탁 혐의를 조

사할 수 있다. 적발된 금융기관의 경우 최대 1000만 유로, 145억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ABLV 은행의 경우 미 재무부가 돈세탁 혐의 조사를 발표한 후 고객들이 예금 수신고의 22%를 인출해갔다. 라트비아 정부나 ECB 지원도 소용이 없어 결국 이 은행이 부도처리됐다. 그만큼 은행이 돈세탁에 연루될 경우 경영자책이 위태로워진다.

돈세탁방지청에서는 내년부터 4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한다. 점점 지능화하는 조직 범죄단체들이 자주 이용하는 돈세탁을 적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U 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은 EU 내 돈세탁 규모를 EU GDP의 1.3%, 약 2천 500억 달러 정도로 추산했다. 해마다 그리스의 국내총생산보다 300억 달러가 많은 돈이 세탁되는 것이다. 27개 회원국별로 돈세탁 감시 규정과 기구가 있어 업무가 분절화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가 3년 전에 돈세탁방지청 설립과 관련 법안을 제안했는데 이제야 성사됐다. 아울러 EU 예산의 부정 지출도 EU가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다. 부정 사용된 돈이 아무래도 세탁을 거치는 게 많기 때문이다.

ERF, 부정지출 대규모 적발

지난 3일 이탈리아 경찰은 6억 유로, 약 8700억 원 정도의 경제회생기금(European Recovery Fund·ERF) 부정 지출을 적발했다. EU는 2021년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8000억 유로, 약 1160조 원의 ERF를 조성했다. 이탈리아는 이 기금의 최대 수혜국으로 약 2000억 유로의 지원을 받았다. 이 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 EU 회원국 정부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

EU 예산의 부정지출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유럽검찰청(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EPPO)은 200여 건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펼쳐 왔다. 이탈리아 경찰은

EPPO의 지휘를 받아 이날 22명을 체포했다. 이 수사에서 이탈리아 경찰은 아파트와 빌라, 람보르기니, 포르세 등 고급 자동차를 증거로 압수했다. 3일 수사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서도 이뤄졌다. EPPO의 수사에서 보듯이 단일시장 EU를 조직 범죄 집단이 십분 활용해 왔다.

이런 사실은 지난 5일 유로폴이 발표한 EU 내 조직범죄 집단의 분석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유로폴, ‘범죄집단 70%가 돈세탁’

2000년 유엔은 초국적 조직범죄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조직범죄는 3인 이상의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힘을 합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유로폴은 이 정의에 따라 처음으로 조폭의 현황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내, 조직원 2만5000여 명을 거느린 821개 갱단의 70%가 돈세탁을 한다. 조폭 집단의 75%가 EU 내 2개에서 7개 회원국에서 활동할 정도로 이들은 다국적 조직범죄 집단이다.

이처럼 범죄 집단은 ‘나는 놈’이었는데 대응하는 EU 기구는 이제껏 ‘똥은 놈’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들의 민첩성과 EU 안에서 국경 없이 활동함을 특징으로 들었다. 이들은 마약 거래부터 불법 이민자 송출, 그리고 부동산과 건설업 진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검은돈을 찾아 기민하게 움직인다.

EU 회원국 간의 경찰협력기구 유로폴, EU 예산의 부정지출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유럽검찰청, 그리고 여기에 돈세탁방지청도 내년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EU 내 검은돈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에 수사와 기소하는 기구의 틀이 갖춰졌다. 중요한 것은 이 기구 간의 협력이 굳건해져 돈세탁 방지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다.

대구대 교수(국제정치학) ‘하룻밤에 읽는 독일사’ 저자 핏캐스트 안샘의 유로록 제작·진행자

이투데이, 말투데이

☆ 빌 캠벨 명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경제라면 신뢰는 그 경제의 화폐이다.” 미국 사업가. 컬럼비아대 이사회 의장, 애플의 마케팅 부사장 겸 이사, 클라리스, 인튜이트, GO 코퍼레이션의 CEO였다. 그는 구글의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에릭 슈미트,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트위터의 잭 도시 및 딥 코스톨로, 페이스북의 셰릴 샌드버그를 코칭했다. 그는 오늘 생을 마감했다. 1940~2016.

☆ 고사성어 / 청풍양수(淸風兩袖)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라는 뜻이다. 청렴한 관리를 비유한다.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은 명(明)나라 우겸(于謙)이 강소성(江蘇省)과 절강성(浙江省)을 아우른 양성(兩省)의 순무(巡撫)로 있을 때 백성들을 잘 보살피려 향간에는 ‘하늘이 은혜로운 관리’를 보내시어 양성을 도우시네(天遣恩官拯二

方)라는 노래가 퍼질 정도였다. 수도로 올라갈 때마다 빈손인 그에게 지방의 특산물이 라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권하자 그가 거절하며 읊은 시. “두 소매에 맑은 바람만 넣고 천자를 알현하러 가서,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면하리라[淸風兩袖朝天去 免得闖闖語長]” 전여성(田汝成)이 지은 ‘서호유람지여(西湖遊覽志餘)’의 ‘현달고풍(賢達高風)’편에 실려 있다.

☆ 시사상식 / 구조적 이익률

은행의 이익은 금리, 대출 규모, 고정이자 여신비율 등의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인다. 구조적 이익은 안정적이고 경성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자 이익, 수수료 이익, 신탁이익 합계에서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구조적 이익률은 구조적 이익을 실질총자산(평잔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지속가능한 이익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 연금개혁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국민연금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개혁은 사적 연금 중 퇴직연금의 강제화 과정과 맞물려 추진될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도 노후소득으로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70% 이상을 보이는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노후소득원의 보완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기준과 같은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22년 연금계좌수를 기준으로 92.9%(지급금액 기준 67.4%)가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되었다. 즉, 일부 고소득자 계층에서 연금으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으나 절대다수인 저소득층에서는 계좌당 평균금액이 1600만원에 불과하여 주택자금, 전세자금, 기타 차입금상환 등 장래 자신들의 노후보다는 긴급한 자금요구에 충당시키는 이른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나타냈다. 한편, 2022년말 기준 336조 원의 적립금은 DB(확정급여)형이 57%, DC(확정기여)형이 26%, IRP(개인퇴직계좌)형이 17%로 구성되었는데 운용구성은 원리금보장형(채권, 단기금융상품)이 298조 원(89%), 실적배당형(주식 및 주식형 펀드)이 38조 원(11%)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실정이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퇴직연금 운용비중은 50% 이상이 실적배당형으로 구성되었고 2008~2021년간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대부분 국가에서 4~6%를 실현하였다. 같은 기간 1.3% 수익률에 그친 한국과는 대비된다.

한국 퇴직연금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근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영국의 NEST(국영고용저축신탁) 체제와 같은 퇴직연금 강제화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필요한데 우선, 가입자들의 중도해지 및 목돈

## 논현로

김병준

강남대 교수  
시니어비즈니스학과



으로서의 일시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보증하에 장기저리의 퇴직연금 담보대출 도입이 요구된다. 영세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영세성 기업의 상황에 따라 30~50% 정도의 정부 재원을 통한 보험료 대체 지급도 필요하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 중 농축수산업자들에게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급해 주는 형태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노후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만하다.

또한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부처가 주축이 되어 퇴직연금 전담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초저수익률에 국한된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적어도 장기적 국민연금 운용성과(33개년 연평균 운용수익률 6.8%)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의 경우를 참조하여 가입자 지정 없이도 연금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을 도입하여 2~3개의 전문 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연금지급 방식은 호주에서와 같이 DB형보다는 DC형으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토대를 구축하여 퇴직연금의 강제화를 시행할 경우,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퇴직연금보험료를 8.3%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대체율을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본지(▶3월 25일자 오피니언면 참조)에서 필자가 제안한 국민연금의 개혁안을 통한 국민연금만의 기대 소득대체율 40%와 합산하여 국민 전체적으로 노후의 합계소득대체율을 60%까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 대부분 일시금지급 노후보장 안돼 원리금보장형 많아 운용수익 미미 저리대출·전담기구 도입 선결돼야

이를 통해 현행 초저수익률에 국한된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적어도 장기적 국민연금 운용성과(33개년 연평균 운용수익률 6.8%)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노트북 너머

정영인

정치경제부 기자



다양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주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소란스런 '공천 파동'을 겪은 민주당의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 대표 '호위부사'로 분류된 인사만 초선 73명 중 39명이란 분석이 나오는 수준이다. 당권 강화를 위한 공천이 국민을 위한 공천일 수는 없다.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 아래 치러진 선거라고 하더라도 입법부의 목적이 정권 심판에서 그쳐선 안 된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현안을 풀어낼 면면이 필요하다. 정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비전과 대안, 개혁 과제 등에 대한 충실한 준비와 인물이 겸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아직 시작하기도 전이다. 벌써부터 민생보다는 탄핵·특검법·정쟁의 정국으로 들어나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천과 총선을 지나며 찾아보기 힘들었던 '국민'이 22대 국회 키워드가 됐으면 한다.

oin@

## 사설

# 5대 은행도 '깡통 대출' 급증·구조조정 시급하다

국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도 '깡통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은행연합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무수익여신은 총 3조5207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 무수익 여신은 통상 '깡통 대출'로 불리는 악성 대출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부동산업의 재무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5대 은행에서 무수익여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차주들도 건설·부동산 회사였다.

올해 1~3월 국내 주요 건설사의 신용도가 줄아갔다. 한국신용평가는 GS건설·신세계건설·한신공영·대보건설의 신용등급, 신용등급전망울강등(BBB- 이상)했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말부터 신용등급 강등 여지가 있는 부정적 등급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

5대 은행의 '깡통 대출'은 광산의 카나리아다. 한계 선상에서 생존을 위한 국예를 하는 것은 건설업체만이 아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상황도 매우 좋지 않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순손실을 냈다. 부동산 PF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총당금을 대거 쌓은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10여 곳에 대해 즉각적인 자본 확충을 요구했다. 비명은 더 커질 것이다. 경기 침체, 대출 연체율 증가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비상 대응 없이는 큰불이 번질 수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안정적인 금융중개 기능을 외면한 채 고위험·고수익 사업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 제 발에 족쇄를 채운 업체가 허다하다. 해당 업체만의 문제도 아니다. 당시 금융 건전성을 관리할 책무가 있는 규제 당국은 뭘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지난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을 공시한 59곳 중 22곳의 연체율은 10%를 웃돌았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30%를 넘어선 저축은행도 있다. 2금융권의 부동산 PF 예상 손실 규모가 최대 13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 분석도 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국내 25개 증권사, 26개 캐피탈사, 16개 저축은행 등 자사 신용평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이 추정했다. 금융 당국은 발끈한다. 일단 "13조 전망은 과장"이라고 일축하고 4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불만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이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는지부터 의문이니 시장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아니 뎀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법은 없다. 지난해 9월 기준 PF 대출 잔액만 따져도 134조 원이 나 된다. 증권사, 2금융권 등의 노출액을 더하면 200조원을 웃돈다는 관측도 엄중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니 위기설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정리할 것과 끌고 갈 것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급선무다. 부실 PF·건설사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도 시급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서두를 일이다. 시한폭탄의 심지가 타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 특허, 특!

# KBS-MBC의 '선택' 다툼

제22대 국회의 원 선거가 4월 10일 치러졌다. 막판까지 접전한 지역들로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선거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을 것이다. 방송사들은 화려한 그래픽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심혈을 기울여 선거방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 가운데 선거방송 프로그램 제목 중 '선택' 문구 사용 관련하여 상표권 분쟁 소식이 있어 관심을 끈다.

MBC는 '선택' 상표를 제35류, 제41류 및 제42류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1997년 최초 등록받은 후, 10년 단위로 존속기간을 갱신하여 왔다. 따라서, MBC는 해당 류들에 포함된 선거정보제공업, 뉴스보도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램 등에서 '선택'이라는 상표를 독점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KBS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방송 제목으로 '선택 300'을 고려하자, MBC는 상기 상표권에 근거하여 '선택'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라며 KBS에 사용 중지를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KBS가 MBC의 사용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않고, 3월 21일 MBC의 선택 상표를 대상으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란

청구인의 상표 사용이 등록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 따라서, KBS는 '선택300'이라는 선거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이 MBC가 보유한 '선택' 상표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특허심판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등록 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상기 심판에서는 '선택' 등록상표와 '선택 300'의 유사여부 및 상표법 제90조에 따른 상표권 효력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S가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나오더라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더 다뤄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향후 선거방송 프로그램에서 선거결과 및 다양한 신기술을 통한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뿐만 아니라, MBC 이외 타방송사들이 프로그램 제목으로 '선택'을 사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으로 보인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 국회, 정권심판 이상의 몫 해야

제22대 국회 구성원이 확정됐다. 이날 당선이 확정된 300인은 다음달 30일부터 4년간 국민의 대리인이자,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으로서 국회 입법권을 책임지게 된다. 국회의원 역할에 비춰보면 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대표성'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각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은 오히려 국민 대표성이 가장 후순위였다고 할 만하다.

결과를 봐도 '고학력·50대 이상·남성' 과대대표된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당선자 300명 중 법조인 출신이 60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직업적 다양성도 충족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에서만 법조인 출신 당선자가 41명으로 여당에 비해 2배 많고, 이 중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맡은 변호사 5명도 포함됐다. 정당인, 당 대변인 등 정치인 출신도 80여 명이다.

연일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경제전문가는 여야 통틀어 24명에 그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적 구성원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자조섞인 평가도 나온다. 경제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정당 정책 방향에 맞춰 입법을 한다면 '포퓰리즘'으로 흘러가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 대표성과 다양성은 확보돼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공천 과정에서부터

##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대표전화 (02)799-2600

홈페이지 www.etoday.co.kr  
팩스 (02)784-1003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시에는 바라는 게 있나요?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해주면 좋겠네!"

Q. 더 건강해지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A. 그렇제! 하고 싶은 일 더 맘껏 하려고

성수동 '요가쌤'  
64세 최영아님

LG의 시와 바이오 기술이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미래,  
같이

